

제331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2월11일(수)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대학도서관진흥법안(계속)
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업무보고(계속)
 -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사된 안건

24. 업무보고(계속) 3
 -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노근 · 정성호 · 이명수 · 김태원 · 강은희 · 박대동 · 최봉홍 · 주영순 · 윤명희 의원 발의)(계속)	12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정문헌 · 이노근 · 정성호 · 이명수 · 김태원 · 김동완 · 강은희 · 박대동 · 최봉홍 의원 발의)(계속)	12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이한성 · 박성호 · 강은희 · 김재원 · 이명수 · 강기운 · 김상민 · 문대성 · 윤명희 · 안홍준 · 박인숙 의원 발의)	12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안민석 · 김상희 · 배기운 · 김광진 · 박주선 · 윤관석 · 박혜자 · 김성주 · 정진후 의원 발의)(계속)	12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김춘진 · 김상희 · 황주홍 · 정성호 · 전순옥 · 오영식 · 박홍근 · 전정희 · 서기호 의원 발의)	12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정희수 · 이만우 · 유승우 · 이한성 · 장윤석 · 정문헌 · 강기운 · 김성찬 · 김태원 의원 발의)(계속)	12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손인춘 · 김장실 · 박인숙 · 주호영 · 이만우 · 강은희 · 김세연 · 유승우 · 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12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김제남 · 심상정 · 김용익 · 배재정 · 은수미 · 장하나 · 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12
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유은혜 · 김동철 · 유기홍 · 김승남 · 김태년 · 유성엽 · 박인숙 · 이석현 · 박홍근 · 정성호 · 박주선 · 강기정 · 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12
1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12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1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강기정 · 박홍근 · 배기운 · 강동원 · 조정식 · 홍의락 · 최민희 · 박민수 · 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2
1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 이한성 · 윤관석 · 이재영 · 조명철 · 김형태 · 주호영 · 이학재 · 박인숙 · 이만우 의원 발의)(계속)	12
1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이낙연 · 박성호 · 박창식 · 김상훈 · 강은희 · 김상민 · 조원진 · 송영근 · 김장실 · 정갑윤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660)(계속)	12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황영철 · 유승우 · 한기호 · 박성호 · 현영희 · 김현 · 이낙연 · 서상기 · 문대성 · 서영교 · 송영근 · 박덕흠 · 서용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509)(계속)	12
22. 대학도서관진흥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윤관석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호 · 이낙연 · 김우남 · 민병주 · 문대성 · 강은희 · 최봉홍 · 하태경 · 이철우 · 정진후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12
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 · 김세연 · 김용태 · 김태원 · 김태흠 · 민병주 · 박성호 · 박민식 · 박인숙 · 신성범 · 여상규 · 유일호 · 유재중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12
24. 업무보고(계속)	15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설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4. 업무보고(계속)

-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원장 설훈** 의사일정 제24항 교육부와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 대상인 기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말씀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앞두고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황우여 장관께 쓴 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잘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고, 더 구체적으로는 ‘밥상은 평등해야 된다’는 제 지적에 공감하면서 정액급식비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지금 교사든 직원이든 다 한 달에 13만 원씩 정액급식비를 받는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들은 밥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까지 의지를 밝히셨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증액이.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아예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특히 공공기관 비

정규직 처우 개선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셨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 교문위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약속했던 내용까지도 업무보고에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교육부에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을지 몰라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달라’ 그랬더니 작성 중이랍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 부탁드리는 것은, 장관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에 없더라도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교육공무직 법안의 처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문건이 안 돼 있다면 오늘 오전 중에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전부 다 배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박주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주선 위원** 저는 황우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존경하고 매우 저 자신이 또 신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4개 대학교 총장이 관계법과 학칙에 따라서 정당한 추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에 총장 임명 제청을 요구했었는데 그 임명 제청을 거부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하게 되면 행정행위의 결정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당사자에게 통보를 안 함은 물론이고, 당시에 국정감사장에서 교육부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임명 제청을 거부하는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학 총장들이, 공주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의 대학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무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가지고 1, 2심 모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주대학교의 경우에.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에 상고를 또 했습니다.

사회부총리로서의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할, 또 법치행정을 이끌어 가야 할 장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학 총장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갈 텐데,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 가지고 계속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상고행위를 해 가지고 사회 갈등을 더 조장하고 증폭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 하는 이 날짜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4개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 거부…… 임명제청 거부를 하는 사유,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만일에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료제출 행위가 법률상 정당행위인지, 적법행위인지를 교육부장관에게 꼭 물어주시고, 제 판단에 의하게 되면 국정감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국정감사 시에 안 하게 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할 텐데 이것도 국정감사 끝난 뒤로는 유아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무시하고 법 절차를 위배한 교육부의 이 처사가 굉장히 오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도가 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홍 위원 요청에 대한 장관 답을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설훈 예, 4개 대학 중에서 한국체육대학은 총장 임명을 했습니다. 체육대학 총장이 되신 분이 과거에 국회에 계시던 분입니다. 세 분의 총장은 인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하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고까지 했다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습니다.

많은 의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부총리이신데 어찌된 일인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총리의 그 명성에 흠만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학교비정규직 자료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교육부 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도 중장기계획을 포함한 여러 인식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별도의 조직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부만이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에 맞춰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적인 계획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급식비 부분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당사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선후와 또 액수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를 포함해서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는 복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금년 들어서 1월이 겨우 지나간 상황이니까 조금 말미를 주시고, 그러면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신 바가 있고 교육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 자신도 큰 현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 4개 대학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즉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다행히 한 대학은 1순위로 올라온 후보가 인사위원회에서, 교육부 내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절차가 순탄하게 마쳐졌습니다.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를 했고, 그 거부 사유의 공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까지의 교육부의 여러 가지를 감안한 확립된 관행이라고 할까, 업무 처리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지원, 지지하는 판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

심·2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판결은 종전 판례와도 일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고 또 교육부로서는 이러한 오랜 관행을 변경하려면 최종심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고심 끝에 상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상고가 곧 선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고가 나오면 교육부는 즉각 그거에 의해서 모든 관행이나 어떠한 문제, 모순되는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새로 나오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로서도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존중을 받으면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되면 자료제출을 포함해서 사유 공개 또 그리고 임용절차에 대한 교육부의 범위와 그 재량의 한계, 이런 것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왕 법률적인 쟁점이 되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말씀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주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국립대 총장 문제 관련해서요. 지금 교육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그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예컨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일들 때문에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즉 현 정권,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맞는 분들이 아니어서 임명제청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유를 공개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의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사자한테도 공개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당사자한테도.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도 있고, 개인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사자들은 달라고 하고…… 당사자들은 공개를 해 달라.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는 알려 달라. 우리 인권 문제 괜찮으니까, 우리 프라이버시 문제 괜찮으니까 알려 달라고 하는데도 안 알려 줘요. 그래 놓고 지금 관행이었다, 교육부의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이렇게

변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은 규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 법률로 하는 거고 규정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교육부가 그런 관행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규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또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대법원 판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설훈** 박주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주선 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국가안보 등 제한사유가 아닌 사유로는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제12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것을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의 관행을 빙자한 자료제출 거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국회 무시를 자업자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거부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정식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특히 총장 임명제청과 관련된 심의 내용은 당사자나 그 외의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제주대학교 총장후보였던 강 모 교수 또 부산대학교 총장후보였던 장 모 교수에 대해서는 이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공개를 하고 누구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관행이 되는 것인지, 또 아무리 관행이 있다 치더라도 법 위에 관행이 우선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행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의 답변 내용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승복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위원장 설훈**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더라도 장관께서 하신 그 설명을 납득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받는 황우여 부총리께서 그렇게 공한 표현…… 말씀하시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총장 취임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에 부총리께서 그렇게 무기력한 자세를 보이십니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정부 여당에, 대통령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은 하고, 판단이 잘못됐으면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결단을 내려서 총장 취임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을 잘 운영하는 거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졸업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졸업장에 ‘총장직무대행’으로 나갑니다.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졸업장에 총장직무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그 졸업장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졸업생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장관께서 결단 내리셔야 할 문제입니다.

○도종환 위원 저도 자료제출……

○위원장 설훈 도종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15년 교육과정 개정 시에 교과서 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데요. 수학과·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진 명단은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역사과는 자료제출을 해도 연구진 명단을 안 주고 계시거든요. 왜 역사과만 유독 이렇게 안 주고 계시는지, 듣기로는 연구진을 구성했는데 17명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맞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 대부분이 국정 찬성론자거나 국정을 반대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도종환 위원 그것 때문에 제출이 어려운 겁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명단을 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명단은 저 자신도 지금……

○도종환 위원 다른 과는 다 제출했는데요, 역

사과는 제출을 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신분 공개를…… 이것이 워낙 여러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공정한……

○도종환 위원 아니, 대학의…… 대학교수님이거나 아니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시거나 연구재단에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신데요. 여태까지 그 일을 해 오신 분들인데 그 명단을 구태여 이렇게 제출을 안 하고 감추실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본인들이 이렇게 비공개를 요청하고 또 공정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도종환 위원 아니, 다른 과 교수들이나 연구진도 다 공정하게 연구해 오고 학자로서 살아온 분들이시거든요. 왜 역사과만 이렇게 안 하십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교육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 국정 전환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자료제출 요청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10월 하순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다시 12월 27일로 연기를 두 달 하더니 12월 27일이 지났는데,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1월이면 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다시 2월인데도 여전히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 전환 관련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가 이미 끝났는데 무슨 검토작업이 이렇게 몇 달씩 걸리고 또 두 달 연기하고 또 한 달 연기하고 이러는지…… 저희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 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연기하면서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시는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흥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답변 좀……

○**위원장 설훈** 도종환 위원에 대한 답변을 부총리께서 하시고 그리고 김태년 위원 말씀하시고, 박홍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단과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원 측이 공식적으로 최종 연구보고서를 교육부에 아직 제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보고서가 공식 제출되면 교육부로서는 제출을 할 예정이고 또 명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사 부분은 워낙 쟁론이 있는 부분이라 본인들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또 평가원에서도 그러한 공정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연구수행 도중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만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연구진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도종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장관님이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는가 본데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부로 이 결과를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제출한 공문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받아 보고 담당자가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대로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뜻인데요.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담당자들의 말씀을 더 들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분석 등등의 이유로 제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분석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금방금방 되는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려고 여러 가지 시기를 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종환 위원** 시기만 괜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최종보고서가 2월

말쯤 종료된다고 통보가 되어 와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국립대학 총장 임명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지금 장관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국민이 들어도 납득이 안 가는 이유이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교육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의 판단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답변이 그렇게 궁색한 거예요.

지금 장관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매우…… 제가 인간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분이어서 이런 표현 쓰기가 조금 그렇다마는 지금 거짓말도 하고 계시요.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임명제청 거부하는 게 몇 번이나 된다고 그게 관행입니까?

2006년도에 직선제로 선출한 총장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선제로 선출했기 때문에 교수회에서 당연히 반발이 심했었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검증한 명백한 사유, 예컨대 음주운전이나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다 밝혀 줬어요. 그런데 무슨 관행입니까?

그다음에 행정은 법과 규정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마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 예외조항 3개에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관행이라고 그래요? 행정을 관행으로 합니까?

그다음에 얼마나 임명제청을 거부했다고 교육부가 확립해 놓은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옆에 지금 교육비서관 출신 차관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자꾸 껴이는 거지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정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른바 관행 그것도 다 규정으로 되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면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이에요. 그거 자료 주세요, 빨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있어서 근거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는 입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이러한 인사처분이 과연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냐가 늘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는 1989년도 대법원 판결, 그때는 총장보다 교수 임용인데 인사문제라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행정처분성을 부인했고 최근에는 2009년도에도 같은 판결이 진행되어서 2010년 대법원에서 이것이 또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판결과 이 부분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과 또 교육부의 입장 이런 것이 조만간에 정리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장관으로서는 인사위원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전에 해 왔던 판결과 거기에 따르는 교육부의 업무 처리에 따라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제가 딱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률가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게 행정처분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아닙니까, 2010년 11월 18일? 명백한 행정행위지요. 행정청에서 한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면 뭐가 행정처분입니까?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위원장 설훈 박홍근 위원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주선 위원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주선 위원 제가 추가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그러면 박주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주선 위원 지난번 10월…… 작년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국립대학 총장 추천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한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도 안 합니까?’라고 장관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 답변이 ‘본인이 원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판결문에도 잘못 됐다고 하는데 왜 행정절차법을 위배를 합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해서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당사자에게 알려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또 만일에 그동안의 관례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왜 관례를 위반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알려주겠다고 답변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장관 답변내용이 아주 모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명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소송을 계속해서 상고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허위 답변이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위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발대상이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김태년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마는 교육부장관께서 말씀하신 판례는 이미 2010년 11월 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총장 임명제청 거부 행위는 총장 임용후보자로 지원하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대학에 의해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지위를 획득한 원고의 공직취임권을 배제하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장관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뭔가 꿩꿩이 속이 있어 가지고 공개를 못 하는 사유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 버리면 장관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거고 국회 무시행위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 방조행위가 된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 상임위원회에 이 고발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직무유기로 고발도 할 것이고, 위증에 대한 방조범으로, 함께 공범으로 고발을 할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경고 차원에서 위원장께 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지금 황우여 장관에 대한 고발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시 제가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잠깐만요. 아니, 국정감사에서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안 알려 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결과적으로 장관께서 허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총장 취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대통령이 내가 알 때는 이거 일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서진들이 판단도 엉터리로 하고,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들을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잡으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만이라도 알려 줘라’ 이러한 말씀이 있으셔서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같은 심정입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렸을 때 제 권한의 범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권한인지는 몰라도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또 이것이 쟁송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1989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임명 제청 그리고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역시 대법원에서 총장 임명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상고이유를 기각하면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을 인용한 것과 같은 지속되는 판결과 교육부의 입장에 따라서 쟁송을 하는 도중에 장관이 이와 달리 공개를 할 경우에는 소송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최종판결이 바로 당해 사건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안홍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안홍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홍준 위원** 오늘은 사실은 법안 의결과 교육부 현안보고 시간입니다. 현안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지만 정식 질의시간에 하셔야 될 내용 같고, 의사진행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아마 이 시간에도 자료제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부에 전국 대학별 모교 출신 교수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왜 이 모교 출신 자료제출을 요구했느냐 하면,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석·박사를 받고 학부를 졸업하고…… 특히 의과대학 같은 데가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대학에서 거의 영재라 하는 사람도, 서울대학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레지던트를 그 과의 주임교수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받고 온…… 제 은사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다 수석 입학, 수석 졸업, 2학년 때 검정고시 수석해서 월반해서 서울대학 의대를 4등으로 들어갔던 그런 분이는데도 전공의를 서울대학 산부인과에서 안 했다고 해서 교수로 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뭇니까, 학문의 근친상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계통의 제자들하고 죽……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학 같은 데는, 하버드 같으면 프리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참고로 알아보려고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240개 대학 중 124개 대학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요 사학 중에 중요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연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같은 데는 자료제출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현황도, 적어도 기본적인 대학의 교수들이 모교 출신인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게 딱 모든 것을 모교 출신을 중심으로 한 자료 자체는 없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만들어서……

○**안홍준 위원** 아니요. 사립대학 교수를 하더라도 임명장은 교육부에서 안 나오니까? 저도 사립대학 의과대학에 잠시 몇 년 있었는데, 발령이…… 교육부에 그 자료가, 학교 출신 이런 자료가 교육부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학 교수임명은 교육부에서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아니, 소관이 아닌데도 제가 제

대를 하고 조교수 대우로 들어갔는데, 교육부 쪽은 전임강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학실장 한번……

전국의 대학의 교수들 명단하고 이력하고 경력자료 다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기본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리 사학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대학정책실장 한석수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들의 교수 현황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 대기업에 위탁을 해 가지고 대학에서 교수임용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받아서 그쪽에서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빠르게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흥준 위원 이게 자료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2009년도는 주요 사학들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가 2009년도의 자료를 보면 88.7%였는데, 이번의 자료제출에는 67.6%로 한 20% 이상 모교 출신 교수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거든요.

아마 외국 대학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대학 출신으로서도 얼마든지 유능한 교수자질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또 그게 비율이 높은 쪽은 시정하도록 하는 목적인데, 오후까지 자료 되겠습니까? 몇 개 대학입니다.

○교육부대학정책실장 한석수 최대한 빠르게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준 위원 고대, 연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외국어대만.

○교육부대학정책실장 한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설훈 박흥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흥근 위원 자료제출 짧게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한 지 일주일 넘도록 지금 주지도 않고, 심지어 담당자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 요청한 거 이해 바랍니다.

지방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후

제 질의 전까지 위원장께서는 장관께 자료제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제가 요청한 게 첫 번째, 교육청별로 5년간 연도별 국비·매칭사업별로 금액과 비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교육재정 분석사업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2월 5일에 제가 요청한 게 2건인데, 그 하나는 대통령께서 교육재정 개편 필요성을 검토 지시하고 나서 교육부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의 검토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별로 초·중·고 교원 명퇴신청 대비 실제 명퇴자 현황, 명퇴수당 지급내역과 신청 대비 지급부족액, 신규교원 발령 및 미발령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 또한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 장관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설훈 예, 정진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흥근 위원 이거 답을 좀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설훈 장관께서 박흥근 위원 말씀에 답을 좀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마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지금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정진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국립대 총장 문제와 관련해서 입이 들썩들썩합니다마는,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에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 총 39개교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에서는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에게 의뢰해서 6월에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서 나온 초안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평가지표 개발 초안과 최종안을 비교해 본 결과 다수의 지표에서 수정이 있었던 점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초안 그대로 평가지표로 활용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현황을 감안해서 최종안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

로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게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평가지표 확정 과정을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초안과 최종안의 내
용의 변경 사유를 적시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자료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와 교육청
단위의 의견수렴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시간 이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2015년도 외국
어고등학교, 국제고, 국제중 평가와 관련된 질의
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최선을 다해
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
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대로 하면 회
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족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실 때까지 장관
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회님들을 모시고 2015년 교육부의 주
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부 간부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춘 차관입니다.

김관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입니다.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입니다.

김재금 대변인입니다.

이기봉 사회정책협력관입니다.

박준모 감사관입니다.

신익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영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오승걸 학교정책관입니다.

박제운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전우홍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배성근 대학정책관입니다.

이승복 대학지원관입니다.

최은옥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승용배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환식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이경희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주명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이구 국립특수교육원장입니다.

정일용 중앙교육연수원장입니다.

성삼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병현 국립국제교육원장입니다.

윤용식 대한민국의학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이어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입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자료는 기 배포된 본 보고서
를 요약한 것입니다. 일반현황과 교육부 소관 법
안 처리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꿈과 끼를 길러
주는 학교,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 교육, 안전한 학교·고
른 교육기회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꿈과 끼를 길러 주는 학교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확산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
겠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내년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범부처, 대학, 기업
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 인프라를 확
충하고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인성교육
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입학
전형에서 인성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사례를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부총리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켜야 될 법안이 많
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하도록 하
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이노근 · 정성호 · 이명수 · 김태원 · 강은희 · 박대동 · 최봉홍 · 주영순 · 윤명희 의원 발의)(계속)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 · 정문헌 · 이노근 · 정성호 · 이명수 · 김태원 · 김동완 · 강은희 · 박대동 · 최봉홍 의원 발의)(계속)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이한성 · 박성호 · 강은희 · 김재원 · 이명수 · 강기윤 · 김상민 · 문대성 · 윤명희 · 안홍준 · 박인숙 의원 발의)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안민석 · 김상희 · 배기운 · 김광진 · 박주선 · 윤관석 · 박혜자 · 김성주 · 정진후 의원 발의)(계속)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 · 김춘진 · 김상희 · 황주홍 · 정성호 · 전순옥 · 오영식 · 박홍근 · 전정희 · 서기호 의원 발의)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 · 정희수 · 이만우 · 유승우 · 이한성 · 장윤석 · 정문헌 · 강기윤 · 김성찬 · 김태원 의원 발의)(계속)
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 · 손인춘 · 김장실 · 박인숙 · 주호영 · 이만우 · 강은희 · 김세연 · 유승우 · 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정진후 · 서기호 · 박원석 · 김제남 · 심상정 · 김용익 · 배재정 · 은수미 · 장하나 · 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박혜자 · 유은혜 · 김동철 · 유기홍 · 김승남 · 김태년 · 유성엽 · 박인숙 · 이석현 · 박홍근 · 정성호 · 박주선 · 강기정 · 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1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박주선 · 최규성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옥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계속)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강기정 · 박홍근 · 배기운 · 강동원 · 조정식 · 홍의락 · 최민희 · 박민수 · 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18.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김장실 · 이한성 · 윤관석 · 이재영 · 조명철 · 김형태 · 주호영 · 이학재 · 박인숙 · 이만우 의원 발의)(계속)
1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이낙연 · 박성호 · 박창식 · 김상훈 · 강은희 · 김상민 · 조원진 · 송영근 · 김장실 · 정갑윤 · 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8660)(계속)
2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황영철 · 유승우 · 한기호 · 박성호 · 현영희 · 김현 · 이낙연 · 서상기 · 문대성 · 서영교 · 송영근 · 박덕흠 · 서용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509)(계속)
22. **대학도서관진흥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윤관석 · 서용교 · 유승우 · 박성호 · 이낙연 · 김우남 · 민병주 · 문대성 · 강은희 · 최봉홍 · 하태경 · 이철우 · 정진후 · 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 · 김세연 · 김용태 · 김태원 · 김태흠 · 민병주 · 박성호 · 박민식 · 박인숙 · 신성범 · 여상규 · 유일호 · 유재중 · 한선교 의원 발의)(계속)

(11시03분)

○위원장 설훈 오늘 회의는 지난해 12월 17일 제330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의결한 후 계속해서 교육부와 소속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심사 소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성범 법안심사소위원장 신성범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4년 12월 7일과 지난 2월 5일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둘째,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김태원 의원, 박홍근 의원, 부좌현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안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성범죄 행위,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했고 둘째,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가법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보완했고 넷째, 유치원회계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불임·난임 휴직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력인정 시험의 시행근거를 통합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 전형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이학재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비 인상으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

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박혜자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인정을 받도록 했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 신고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의 유형을 다양화했고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김장실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단계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산관리 및 회계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한편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제명의 다른 개정안 의안번호 509호는 앞서 보고드린 개정안에 그 취지가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은 대학도서관의 안정적 지원 및 평가를 통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첫째, 도서관법 제34조를 고려하여 대학에 대한 정의 규정에 원격대학, 각종 학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했고 둘째, 대학도서관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셋째, 교육부에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에 교육부 직제로 가능하고 교육부 인력운용이 실제로 전담부서를 설치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삭제했습니다.

끝으로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 학과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

화하기 위하여 계약 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의 계약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학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해당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소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정부가 제출하고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정부가 제출하고 정희수 의원, 김태원 의원, 박홍근 의원,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 이학재 의원, 정진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박혜자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김윤덕 의원, 김장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660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09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의결할 차례인데 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 제1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도서관 진흥을 목적으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의 목적 및 정의 조항,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학의 대학도서관 설치·운영의 의무조항, 대학도서관의 업무, 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입니다.

다음 제11조부터 나머지 조문과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 등 직원의 배치 의무조항, 다른 대학도서관과의 교류·협력, 교육부장관의 대학도서관 평가 조문 등과 부칙에서는 도서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처로부터 오늘 처리한 법안과 관련한 인사말을 듣는 순서인데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업무보고 상관없어요?

○위원장 설훈 업무보고 중이니까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지금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인사하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한 2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비 인상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현장에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유치원비 경감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충고와 고견은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업무보고(계속)

-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1시15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면 이어서 업무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이과 통합형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도 올 9월에 차질 없이 확정 고시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친절하고 재미있는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최고 전문가인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내실화하여 교원 양성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직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 단계별 연수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매월 한 분씩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한 입시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수능 출제 오류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올 3월까지 마련하고, 중장기 수능 개편 준비도 마쳤습니다.

또한 2018년도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질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 구조 개혁과 함께 컨설팅을 통해 대학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유학생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기능을 대학과 전문대로 흡수하여 대학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을 혁신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이른바 K-MOOC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강좌의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연구 경쟁력과 연구의 실용화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연구의 기반을 확대하고 인문학 진흥 종합 방안을 마련하여 인문학 풀뿌리 연구를 지원하며, 타 학문 분야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인문학 패러다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고,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하여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학문으로 정립해 전 세계에 알리고, 개도국에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를 전파하여 교육 분야의 한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 올해 5월 개최되는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에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 평생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 일체형 특성화고를 올해부터 9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국 41개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 사업을 올해 시범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문대학생의 채용이 약정된 주문식 교육과정

을 올해 3000명까지 확대하고, 취업과 연계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재직자와 성인학습자의 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부를 신설하고,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충하며 인문학의 대중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내년까지 NCS 학습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전문대학에, 내년도에는 특성화고교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본격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 기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교원들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40년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례화하고, 학교 신설 시 공정 단계별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학교 시설 내 석면, 라돈의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학교문화 개선을 통해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 징후,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살 원인별 맞춤형 예방과 치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입시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통해 선행 출제 풍토를 근절하고, 학원비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도 올해는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유치원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탈북학생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업 중단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가부와 함께 학업 중단 학생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실시하며, CCTV 설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대한 공시를 진행하고, 재정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보고드린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고용,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 부총리 부처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정책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속 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관 관계상 각 기관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현안 또는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3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을 초과할 경우 1분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 유영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회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국사편찬위원회는 본연의 업무인 사료의 수집, 정리, 편찬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올해도 계속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한 자료를 약 10만 장 수집하겠는데, 그중에서도 일제의 한국인 강제징용 및 전쟁범죄 관련 문서를 발굴하는 데 치중하겠습니다.

또 일본의 외교사료관 등에 있는 여러 사료를 약 8만 장 수집할 예정인데, 특히 올해가 한일협정 체결 50주년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한일회담 및 독도 관련 자료 수집에 치중하겠습니다.

또 중국 북경에 있는 국립 제1역사당안관 및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 소장된 한중 사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수집된 한국사 사료의 편찬·간행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신편 고종시대사를 편찬·간행해 왔는데 올해에도 그것을 계속할 것이고, 근대사기초자료집 또 한국사료총서, 구술사료선집, 그리고 북한관계사료집 등 중요한 사료집을 계속 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편은 지난 한 15년간 수집한 자료의 디지털리제이션(digitalization), 정보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승정원일기의 정보화를 완결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왕조실록과 중국의 명실록·청실록 등을 DB로 구축해서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와 동양사 연구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 등의 사료를 정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를 보급하는 작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5년 이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약 30만 명의 응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올해가 한일협정 체결 50주년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해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연수·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근래에 초·중등학교 역사교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및 장기 역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연수는 이름이 국사전문교육과정이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250명이 됩니다.

그 이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올해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사편찬위원회는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에 남북한 간의 역사 교류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국사편찬위원회는 북한 역사학자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과 여러 번, 15차에 걸쳐서 항일역사문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온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것을 할 것이고, 또 중국 산둥대학에서 제3회 한중 역사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거기에 북한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습니다.

그 외에 남북한관계사료집을 계속 발간하고, 남북역사학논총이라는 저널을 계속해서 발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동안 중단된 남북 역사학자 간에 학술회의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1945년부터 2015년간 항일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이고,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통일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앞으로 남북한 역사학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장기 계획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추진받은 다음에 법무부, 통일부의 관련 직원들과 더불어서 활발하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역사학자들 간의 공동연구, 학술 교류 등 역사학 분야에서 통일에 도움이 되는 역사학 교류·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제가 3분 안에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훨씬 지났습니다.

다음 분이 하실 때는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우이구 원장님께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우이구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우이구입니다.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수교육 교원 및 학교 관계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장애학생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 사이트 운영, 콘텐츠 개발,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 등의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와 고등교육, 평생교육,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위한 자료 개발을 추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과 그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원은 장애학생을 위해 국가 지원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앙교육연수원 정일용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연수원장 정일용 중앙교육연수원장 정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중앙교육연수원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의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201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 운영 개요입니다.

집합교육 8691명, 원격교육 14만 2800명 등 총 15만 149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대를 대상으로 핵심역량 기반 교육훈련 컨설팅과 찾아가는 맞춤형 현지 방문 연수를 실시하여 국립대 역량 제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정책의 실행력 제고 및 핵심역량 중심의 연수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지원하는 연수를

위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과정,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과정 등 정책 연수를 개설하겠습니다.

둘째, 핵심역량 중심의 기본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급별 기본교육 15개 과정을 편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설계 시 교육 내용의 현업 적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원격 연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총 55개 원격과정을 개설하고, 신규 개발한 모바일 콘텐츠는 시·도 교육연수원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교육훈련 컨설팅 등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과 시·도 교육연수원의 연수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연수 품질 제고 및 안전교육 강화 분야입니다.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연수생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수원의 성공적인 대구 이전 추진입니다.

2015년도 10월, 대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사 이전을 철저히 준비함은 물론 지역 유관 기관과의 우수강사 풀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적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수원 대표 브랜드 교육과정 개발·운영입니다. 가칭 'NETI 창의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창의적 경영역량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학교 관리자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행복한 학교 실현과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삼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성삼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성삼제입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위

원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일반 현황은 제외하고 2014년 주요업무 현황과 2015년 심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심사한 소청심사 사건은 614건입니다. 이 중 41.9%를 인용하였습니다. 절차하자를 제외한 인용률은 25.9%입니다.

국공립 교원의 경우 222건을 심사하였으며 인용률은 24.3%입니다. 세부적으로 징계는 29.8%, 재임용 거부는 71.4%, 기타 처분은 13.2%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립교원은 39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용률은 51.8%입니다. 징계는 55.3%, 재임용 거부는 66.2%, 기타 처분은 31%를 인용하였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징계 41.9%, 재임용 거부 66.5%, 기타 처분은 23.5%를 인용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총 심사한 고충사건은 8건이고, 2건을 인용하였으며 6건은 인용하지 않거나 각하하였습니다.

2014년 소청심사위원회가 참여한 행정소송 사건은 총 58건이었습니다. 이 중 50건을 승소하여 86.2%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 심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기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정결정기한 내 심리를 위해서 월 2회 심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청구인의 변론시간 확보와 출석발언 기회 보장을 위해서 소청 접수 시에 심사 예정일을 안내하겠습니다.

4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건전한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금품수수, 성 관련 비위, 학생 체벌, 성적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는 시간강사 재임용 거부도 우리 위원회 소청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 업무 관련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여 청구인 권리 구제와 서비스 만족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제교육원 이병현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 이병현** 국립국제교육원장 이병현입니다.

국립국제교육원 주요업무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사업 목표 및 전략과제입니다.

우리 원은 국제교육 교류 내실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후 추진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과 교육 한류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국제학생 정부 장학금 지원 사업(GKS)입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지원 사업은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학위과정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장학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3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 외국인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국제교육 교류 사업입니다.

일본과 중국 학생을 우리 학생과 상호 교환 방문토록 하여 우호 친선을 증진하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에 교사와 예비교사를 파견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외국인 유치·초청·관리기반 체계화 관련입니다.

유학 잠재력이 큰 국가와 도시를 대상으로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적극 정비하고 있으며, 유학생 유치는 물론 우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기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외동포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한민

족 정체성을 함양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재외국민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 도서 및 교재를 100개 국가의 재외 교육기관에 72만여 권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3쪽,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걸쳐 20만 8000여 명이 지원하여 2013년 대비 약 25%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시행 국가를 추가하는 등 유학생 유치와 한국어 보급 확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외국어 공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등학생의 실용영어 구사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과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00여 명의 원어민 보조교사와 400여 명의 영어봉사장학생을 선발하여 전국 초·중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현재 대학로에 있는 청사를 경기도 분당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7%입니다.

우리 원은 재외동포 교육을 비롯한 국제교육 교류사업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가 위상 제고와 교육 한류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한민국학술원 윤용식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윤용식**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윤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5년 학술원 주요업무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5쪽 기구와 조직 및 시설현황, 6쪽 예산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은 논문 및 저서가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연구자를 매년 6명 이내로 선정, 수상하고 있으며 2014년도까지 총 228명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 학술세미나 개최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9쪽 정책토론회 개최, 10쪽 한일 학술포럼 개최, 11쪽 국제학술교류, 12쪽 간행물 발간은 보고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연구 참여 사업은 2010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총 7개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은 학술원 회원의 학술 업적 정보를 EBS와 협업하여 영상으로 제작·보급함으로써 사회일반과 젊은 세대들에게 홍보하고 영상기록물로 보존·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기초학문육성 우수 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교육부 위탁 과제로서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대학·연구소 등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 발전과 출판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 사항으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예산현액이 61억 7100여만 원이고 집행액은 58억 780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9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월 1일 현재 4억 4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17쪽~24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민원처리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학술원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북아역사재단 김학준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신성범 간사님과 김태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우선 주요현안 및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역내 국가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른바 위안부 및 교과서 왜곡 관련해서는 국내의 시민단체·관심인사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고조선 강역, 장성 동단 문제 등 우리 상고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중국의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하는 한편, 재단의 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복 70년, 한일협정 50년 등의 계기성 쟁점에 대해서도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학문적·정책적 차원의 대응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와 관련해서는 독도교재의 보급과 국제무대에서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이하입니다.

우선 재단은 영문저널 2종 발간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역사 논쟁에 적극 대처하고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베트남 등과의 정책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역사 통합의 토대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은 올해에도 우리 고대사와 한·일, 한·중 관계사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심화하면서 역사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공동역사 구축을 위한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습니다.

재단은 청소년과 일반인,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역사 현안 및 독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영상 심포지엄,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단은 독도 영토주권 수호 및 동해 표기 오류 시정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독도체험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준 이사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다가 오후의 질의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다음, 한국장학재단 박병선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병선**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한국장학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2015년 예산총액은 10조 300억 원으로 그중 정부출연금은 4조 1800억입니다.

저희 보고자료 7쪽~30쪽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는 학자금대출과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사업은 든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용자, 저금리 전환대출로 총 3조 6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근로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전문대우수장학금, 국가연구장학금, 드림장학금 등 총 3조 9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료 31쪽~36쪽의 주요 현안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6~7%대 고금리를 2.9% 저금리로 내리는 전환대출 사업입니다.

시중은행과 행자부가 협업을 강화하여 전환대출 실적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소득분위 산정체계의 안정화입니다.

종전과는 달리 금융재산 및 부채를 포함하는 범정부 표준복지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득분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종전에 없던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서비스 기반인 저희 재단의 고객 직접 상대 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 처리를 신속 성실하게 수행하여 소득분위 재산정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경영혁신에 앞장서는 재단이 되고자 합니다.

우수 공공기관으로서 대출·학자금 상환업무를 내실화하여 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대구청사이전, 대학생 기숙사 건축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배용 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배용입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

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국학 진흥이라는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한국학의 본산으로서 말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연구·교육·국제교류·정보화 및 한국학진흥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한국학 기초 및 중점연구, 글로벌시대의 한국적 가치와 문명연구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심층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자료 현대화 연구사업은 장서각에 소장된 고전 자료의 탈초·역주 및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연구와 전문성을 함께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회의 개최, 출판물 발간을 통한 한국학 연구성과를 학계 및 국민들에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장서각에 소장된 한국학 기초자료의 집적과 제공을 위해서 국내외 한국 학계에 고전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장서각에는 현재 약 16만 7000여 점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건 이상의 귀중한 고서, 고문서를 기증·기탁받아 보존 처리하고 문화재로 등재 신청함으로써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동 시대인이 고전을 공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석박사 과정의 차세대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34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126명을 포함한 264명의 학생들을 차세대 한국학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학당, 한문후속세대 양성사업 운영을 통해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국학 및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교수 파견, 학술연구 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학 진흥을 세계적으로 도모하고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각국 대사 및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알리기 사업, 교과서에 실린 왜곡을 시정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35개국 360권의 외국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시행합니다.

이제 연구원에서는 국내외 한국학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교육부의 지원으로 한국학 선도연구 지원, 한국학 교육 강화, 한국학 인프라 구축 및 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위원 황우여 부총리님, 오랜만이네요.

부총리 되신 지가 거의 두 달 되어 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인태 위원 어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규정도 만들어지고, 또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하고 만나서 당·정·청 회의도 자주 열리고 할 텐데, 어떻게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실 만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유인태 위원 아니, 7분밖에 안 되는데 자꾸 시간…… 시원찮은 질문에 자꾸 시간을 뺏으시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유인태 위원 아니, 그런데 사실 처음에 장관으로 가실 때 교육부 공무원들의 기대가 컸고, 외풍을 막아 주고, 그래도 집권당 대표를 하신 분이 오셔서 기대가 컸는데……

사실 작년 예산국회 때 장관께서 직접 여야 간사하고 누리과정 합의해 놓은 게 원내수석부대표한테 이렇게 백지화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부총리 영이 서시겠나 이거예요. 그때 소감이 어땠어요, 그렇게 합의해 놓고 그것이 뒤집혔을 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합의가 그때 이른바 연동에 대해서 했는데 오해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결과

가……

○유인태 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만큼 여러 가지 경륜도 쌓으시고 그랬는데 사회관계장관회의니 어찌고저찌고 회의는 앞으로 부총리로서 많이 주재도 하시고 할 텐데 웬지 그 회의 해 봤자 뭘 소용이 있냐…… 오늘 아까 자료요청이니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던 것하고 국립대 총장 문제니 뭔가 실세들이 다 빠진 회의, 허세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느낌이 온단 말이지요.

이번 차관 인사에 대해 인사권자하고 의논을, 상의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연락은 받고 있는……

○유인태 위원 연락만 받으셨어요, 누가 간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연락하고 의견 교환했습니다.

○유인태 위원 원래 차관 인사는 장관하고 대통령 이 의논을, 의견을 물어본다고요, ‘이 사람은 어떠냐’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유인태 위원 문체부차관은 자기가 발탁했다고 큰소리치던데, 여기서 아무도 믿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믿지는 않아도 그래도 의논 정도는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상지대 감사는 지난 12월 5일 날 했는데 그 규정에 보면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60일이 지났는데도 ‘정리 중’이라는 답변만 오는 것은 왜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저도 이 감사가, 재촉을 하고 있는데 12월 11일 날 감사가 끝나 가지고요.

○유인태 위원 12월 11일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매듭을 지으리라고…… 대개 한 두 달 걸린답니다.

○유인태 위원 원래 계획서에는 12월 5일인데 60일 내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던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그것을 지키게……

○유인태 위원 지금은 ‘정리 중’이라는 답변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지키도록 해서 재촉하겠습니다.

○유인태 위원 그러시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의 지시사항은 ‘부총리겸’ 저거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서면으로 온 것 보면 “장관 지시사항은 대통령·총리 지시사항과는 달리 ‘온-나라 시스템’으로 별도 관리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부의 부총리께서 지시한 것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하고 총리 지시사항만 관리가 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게 외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 내부 관리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유인태 위원 있는데 왜 그것을…… 있으면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교육부 자체의 장관 지시사항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이 왔고요.

시간 때문에…… 됐습니다.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말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인태 위원 그리고 장관께서 며칠 전에 대학생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취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인문학 소양을 생각해야지 취업이 어려운 데 인문학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조금 표현은 다른데, 제 생각에는 취업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인문학을 강조하면서 인문학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취업과 인문학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지요. 선택할, 어느 하나는……

○유인태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이번에 7500억 인가 선도대학 그것은 전부……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서 3년간 7500억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인태 위원 이 얘기는 완전히 인문학 쪽은 이제 별로 취업하고 관계없으니까…… 오늘 업무 보고한 것하고도 영 다른 말씀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하여튼 인문학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인문학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대라든지 또 공업 계통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어느 곳은 넘치고 어느 곳은 부족한 것을 조정하는 사업이지요.

○유인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인문학의 중요성을 장관께서도 어떤 데에서는 말씀을 하시다가요 최근에 지난 1월 24일 연합뉴스하고의 신년 인터뷰도 그렇고 대학생들과 간담회에서도 하신 말씀을 보면 장관의 철학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대학은 어디 취업이나 잘 되는 것을 열심히 해야지 인문학 같은 게 뭐 그리 소중한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말씀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끝날 때쯤 해서요.

○유인태 위원 예, 그러시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나오시지요.

하여튼 이번에 새로운 설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억울하다는 사람들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살펴보셨나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병선 예.

○유인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병선 지금 소득분위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현재 1만여 건이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 7000건이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민원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업무가 폭증해서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인태 위원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 구구절절 몇 개는 인용을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못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의, 1분위였다가 9분위로 갔다는 사람의 그런 억울한 사정,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의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뭔가 설계가 정교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선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병선 지금 새 체도가 시행 첫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 소득분위 판정에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의

문의가 오고 대개의 경우 저희들의 전화 상담으로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그 자료를 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서 투명하게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점하고 그다음에 학생 본인이 그 사이에, 시차 사이에 예를 들면 폐업이라든가 실업 또는 부동산 처분 이런 것과 같이 재산 변동이 생겨서 그것을 직접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정도로……

○**유인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선정방식을 바꾼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고 그러면 그 방식 자체를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다시 한 번 새로운 설계를, 합리적인 설계를 강구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예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까마는 일단 크게는 과거보다 대폭 소득분위 산정의 공정성 또 적합성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몇 년 전의 감사원 감사 때 거의 17%나 되는 그런 비중으로 오지급이 있었다고 잡혔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설훈** 유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지금 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취업이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사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학 구조를 보면 물론 대학 자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사대 같은 경우도 매년 교사임용자격을 한 2만 3000명을 부여하는데 국가가 아무리 교원을 임용하려 해도 5000명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매년 1만 8000명씩 쌓여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문이나 이런 데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0만 명가량의 공학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균형 있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재조정을 하고, 다만 여기서 인문학,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기업에서는 인문학하는 사람들만 뽑습니다. 그러한 기업도 양성을 해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또 현재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나 인문학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고 이대로 두면 오히려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인문학이나 또는 학문 자체를 위한 분야와 학생들의 취업과 연관되는 각종 학문 분야를 균형 있게 잘 맞추고 이것은 전적으로 대학이 주도하도록 하며 정부는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서 그러한 전환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변경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특별히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중이고, 학생들 의견도 듣고 대학이나 산업체의 의견도 들어서 선진국형, OECD형의 인력·인재 양성 구도를 갖춰 가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의 수요와 인재 양성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또는 교직에 불안이 없도록 제가 오히려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우리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소질에 맞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교육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를 올해부터 실시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지요? 작년까지는 거의 연구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됐는데 연구학교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수업 참여 그리고 학교 분위기, 학생들의 만족도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런 것에서 제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 그리고 교

육청 단위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에 예측되는 문제도 사실은 심각하게 세분화되어서 봐 주셔야 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청 단위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서는 이러한 많은 수요를 스스로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단위로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뒷받침을 꼭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을 때 고등학교 진학할 때 자유학기제 부분에 대한 것을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할지 여부 이런 부분은 각 교육청과 빨리 논의를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겨 두더라도 결론은 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등학교 진학할 때 입시 여부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것은 지금은 이제 결론을 내려서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은, 청소년들이 진로를 체험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입해야 될 교육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의 자원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외부 기관과의 협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교육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이 시험이나 평가로부터의 해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다시 이것이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을 하면서 그 결과물이 잘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여러 가지 협정 또 협약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앞서서,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서는 전경련하고 각 산하의 경제단체들이 지원책을 스스로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요. 사회 분야도 또 문화 분야도 문체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준비해서 모든 것을 공자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강은희 위원 장관님,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위에서도 준비를 하셨지만 실제로 각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협약들이 되고 교사들이 정말 체험학습을 할 때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현재 실제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이과 통합형 과정 아까 업무보고 때도 9월에 확정 고시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강은희 위원 이게 현행 안대로라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국·영·수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과학 과목이나 인문학 과목들은 줄어들 우려가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논의를 부탁드렸는데 거의 변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체계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목이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30~40개 정도 되는데요. 수능체계하고 연계가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수능체계하고 연계 없이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수능체계하고 어느 기본 틀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학교 내에서는 변칙 수업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대학에서도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만점자 18명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지만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이 선행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수가 되어야 되는데 입시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대학 교과에서 필요한 그 선행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대학의 입시에는 합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합격된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면 선행 과목들이 너무 이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게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대신 정작 필요한 능력들이 향상되지 않는 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과정 이게 완료가 되어도 수능체계하고 어떻게 된

다 하는 큰 그림이라도 정리가 안 된다면, 이게 완료되고 난 다음 수능체계를 다시 본다면 이미 너무 늦다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금 말씀대로 현 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 정도 수능에 대한 반영과 그 내용을 확정하고 2021년 대학 입시안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강은희 위원님 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장관님, 이게 그냥 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영·수 시간만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중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보편적 교육과정이 완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장관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은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유인태 위원님께서 상지대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달, 60일 되지 않았습니까, 12월 11일에 감사 종료했으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은혜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결과 발표, 아직도 계속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매일 물어보는데 다 지금 출장들을 많이 나가 있거든요.

○유은혜 위원 장관님, 그런데 상지대 문제가 지난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교육부에서도 상지대 문제를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래서 이것이……

○유은혜 위원 지금 상지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정대화 교수님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도 출장 갔다 오자마자 얘기 들었습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결과

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감사관 박준모 저희들이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유은혜 위원 심의를 마쳤는데 왜 발표를 못하고 계십니까?

○교육부감사관 박준모 그런데 절차상 저희들이 그동안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 인원이 계속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지대건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고 출장 가 있는 직원들을 교대로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유은혜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들으시는 상지대 관계자분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답답합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심각하게 학교에서 갈등과 혼란으로 연이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출장 운운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하여간 이것이 감사관실이 우리 교육부하고는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아마 금주내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은혜 위원 제가요, 장관님, 지금 상지학원에서 긴급처리권이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은혜 위원 이 긴급처리권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이중적이더라고요. 지금 상지학원에서 작년에 6명 이사가 한꺼번에 임기 만료되고 난 이후에 긴급처리권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결정들을 했느냐 하면 김문기 씨를 설립자로 하는 정관 변경을 여기서 의결했고, 또 김문기 씨 반대하는 교수님을 직위해제하고 파면했구요. 그리고 또 김문기 씨 측근으로 활동하는 4명을 특별채용해서 사무처장, 총무부장 이런 주요 보직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기가 끝난 이사들, 그런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마치 지금 이사인 것처럼 임원 행세를 하면서 이런 결정들을 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임기가 끝난 이사가, 그것도 교육부에서 지난해 11월 17일 날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해서 연임 신청이 반려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전혀 긴급하지도 않은 사무를 긴급처리권을 활용해서 사무를 그냥 마음껏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현행 법령상으로는 긴급처리권에 어떠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유은혜 위원 제가 봤습니다. 장관님, 그것도 이중잣대입니다. 상지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장관님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2013년에 조선대에서 긴급처리권 활용해서 정관을 변경하자고 하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이것을 제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 이런 공문을 보내서 조선대에서는 긴급처리권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런 이중잣대를 지금 계속 교육부가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 결과 이것 발표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 지난 국감 때 교육부에서 장관님께서도 상지대사태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던 그런 분명한 의지가 후퇴해서 뭔가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로 지금 바뀐 것 아닌가, 계속 상지대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께 여쭙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지금 이것이 이 사이 그저 뭐 걸핏하면 다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상지대 임원뿐만 아니라 이사회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겠다는 것이……

○유은혜 위원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두 달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비정상화되고 있어요, 지금. 1월 14일 날

상지학원에서 임원취임 승인 신청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반려된 3명이 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변석조 씨까지 포함하면 4명의 부자격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9명 중에서 이 4명을 제외하고 5명은 임원취임 승인 거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로 신청한 5명이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결정한 임원들을 취임 승인해 달라고 승인 신청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하여간 감사결과가 조만간에 나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장관님께서 국정감사 기간에 보여주셨던, 답변하셨던 상지대 문제 바로잡겠다고 교육부의 입장, 지금 취임 신청된 임원들 다 자격 없는 분들입니다. 절차도 부적격하게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임원취임 취소처분 내리시고 임시이사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단순히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지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하여간 법적인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존경하는 유은혜 의원님실로 저희가……

○유은혜 위원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대화 교수님 이런 사건도 묵인할 수 없고요. 상지대와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적인 것을 운운하면서 지연시킨다고 한다면 교육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재정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원칙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성회계 관련된 법안을 내놓고 있고 지금 병합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두 가지 원칙만큼은 교육부에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무,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성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될 첫 번째 원칙이고요. 국가, 정부의 재정 책무성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그 의지가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립대 구성원들, 특히 기성회 직원들에게 이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법률에 국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분명히 못 박고, 그리고 기성회계 직원들이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유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 장관님,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EBS 2TV가 개국한 거를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오늘 합니다.

○**박주선 위원** 공영방송 EBS 다채널방송을 통해서 연간 사교육비가 추산된 기관에 따라서 18조 원 내지 33조 원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하고 있는데 그 분석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주선 위원** EBS 2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EBS의 수능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선 교육형평성 제고 효과가 약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8925억 원이다, 또 사교육비 억제액이 1조 1370억 정도 된다, 그리고 고소득가구에 비해서 저소득가구가, 또 대도시에 비해서 중소도시에서 더 효과가 크다, 이런 보고서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가 저는 대폭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EBS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원칙적으로 지금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자꾸 축소되고, 특히 특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국회 결산, 교문위 이쪽에서 의결하신 바가 있고 부대의견을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특교 지원 축소 및 교재 수입금의 방출사업 손실 보전하지 말고 교재가격을 인하하라는 원칙으로 일단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일부 특교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국회와 함께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311억이었고, 그다음에 11년도에 269억, 그다음에 260억, 240억, 220억……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원이 방통기금하고 교육부장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특별교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총액이요?

○**박주선 위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한 1조 4000억 정도 되는……

○**박주선 위원** 그런데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는 데다가 특히나 빈부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현상 속에서 지금 가난한 집 학생들에게 굉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 지원이 대폭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게 견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그야말로 공영방송화해서 교재판매 수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전적인 공적재정 지원하자는 것이 이상적인데 또 그쪽으로 한참 가다가 이게 수능교재 수입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용하라는 국회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년도 운용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증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2TV가 개국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430강좌에 2만 4944편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은 672강좌에 1만 3621편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 복잡한 대입 전형에 대해 설명해 주는 EBS 고교입시 설명회 역시 2012년도에 400개 고교에서 2013년도에는 203개 학교로 이것 역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수능강의 프로그램도 반토막, 대학입시 전형 설명회도 반토막, 갈수록 EBS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고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데 오늘 2TV 방송이 개국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정부 방송국 증설 허가가 있어 가지고 된 것 아니에요? 활용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EBS 방송국 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게 지금 입시설명회를 하려면 평균 연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전체 우리 대한민국 금년 예산이 375억 원인데 이 7억 원 정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입시설명회를 반토막을 내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교육방송이 소속이 방통위 이쪽인 데다가 다만 교육 분야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조차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지금 국회 결산 소속, 우리 결의가 특교나 이런 것 지원할 대상이 아니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해서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국회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의향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수능하고 EBS의 수능강의하고 연계율을 70%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축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축소나 확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달라는 것이 또 많은 입장이 있습니다. 70%에 묶이다 보니까 수능 낼 때, 이것을 체감도 70%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지문을 옮겨오다시피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거기에, 교육부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을 위한 수능제도개선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회의 개최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거의 지금 3월에 일단 종료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여섯 번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렴된 의견이 있을 텐데 수렴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고 해도 또 이것도 자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중간보고 한 번…… 그런데 이게 국회에 나가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로 해 가지고 보내주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위원님께 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만일 저희들이 관리 잘못해 가지고 누설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고발하세요.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웃음)
어떻게 의원님을……

아니, 그 전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면 국회법을 고쳐 가지고 이렇게 예민한 문제는 국회의원한테 줄 수가 없고, 국회의원한테 주게 되면 사전에,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누설이 되어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법을 고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닙니다. 박 위원님께 중간보고 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오늘 오후에 질의 순서가 되어 있는 윤관석 위원이 “대학총장들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알려 달라.” 그랬더니 “구두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윤관석 위원에게 구두로 보고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마 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시를 다 했는데요.

○박주선 위원 그러면 윤관석 위원에게는 보고를 하고, 저는 자료제출을 그렇게 요구하는데 저한테는 구두보고는커녕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윤관석 위원한테 보고를 안 했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보고는 했답니다.

○박주선 위원 4개 대학교 총장의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보고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방통대만 한 것으로……

○박주선 위원 방통대는 고지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주선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안 해 주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자료를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요구해서서 그때 아마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와서 보시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밀사항이 없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른데, 비밀로 하는 것이 관행인데 왜 또 일부 위원에게는 구두로 보고를 합니까?

진실된 내용의 보고입니까, 아니면 면피용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 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입니다.

당시 윤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평생직업교육국에서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라든지 대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실에 전달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임용 제청 거부 사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가 신문에 나온 것, 방송에 나온 것 편집해 가지고 만들어서 보고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 저희 국에서는 인사위원회 관련된 업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내가 당신 나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왜 나와 가지고 답변한다고 그러세요.

(웃음소리)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훈 답변할 것이 없을 거예요.

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식사 잘 하셨어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한참 논란이 됐던 국립대 총장 문제부터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법원에서 패소하고 또 대법까지 상고를 하고, 좀 있으면 1심·2심 나오면 또 패소할 거고 또 상고해야 되고,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대단히 유감입니다. 교육자치권을 어떻게 보면 더 권장을 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려가면서 교육을 살려야 될 교육부가 교육을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참 보면, 특히 작년 경우에 갑질에 대한 게 참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교육부와 대학의 관계가 갑을 관계에

서 지금 교육부가 심각하게 갑질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황우여 장관님 겸 부총리의 이미 지나 소신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고요.

교육부에서 어쨌든 공주대·한국방송대·경북대 등의 총장 문제에 대해서 임용제청을 계속 거부하면서 재판까지 가는 아주 불쌍사나운 모습이 벌어진 건데……

먼저, 일단 장관이 보시기에도 참 안타깝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꺼번에 네 곳인데 한 곳이 정리됐기 때문에 이제 세 대학이 남았는데,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이 문제로 풍파가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수습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오늘도 아까 오전에 교육부에서 임용제청 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법원에서 패소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추궁이 있었는데……

옛날에 보면 제주대 총장에 대해서, 2009년도에 보면 그때도 재추천을 요청했을 때 ‘검직 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재추천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사실을 적시했었어요.

이번 경우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패소를 하지요. 스스로가 패소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와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밝혀주지 않아요. 물론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밝히지 않은 이유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적절한 이유와 근거가 없기 때문이거나,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비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립대 총장에 대해서 임용권을 가진 정부와 정권이 총장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동안 죽 아주 오래 전에……

○조정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얘기는 아까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도 다 봤어요. 판례가 어찌고저찌고 하는 얘기는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교육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장관님에 대해서도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곱지 않게 보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다가 대법까지 가 가지고 또 패소해 가지고 교육부 입장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지거나 그런 사이에 시간은 질질 끌고 학교와 학생들은 피해자가 되고 교육부가 다 망신당하고 욕먹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그게 아니면 결국은 얼마 전에도 한체대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낙하산인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끝장보겠다고 해서 결과가 뻔한 거 가지고 패소하지 마시고 빨리 상고를 취하하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고 취하하시고 빨리 임용제청을 수용하는 게 그나마 앞으로 피해를 더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아직까지는 유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것이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 정권에 걸쳐서 교육부에서 일관된 입장이랍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곧 내려지니까 대법원 판결이 결론 나면 이후 그에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뿐만 아니라 공주대는 대법까지 상고를 하셨지만 다른 데는 또 진행 중인 데가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때 봐서……

○조정식 위원 그래서 수습을 빨리 하실수록 좋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 자신이 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당장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바꾸는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조정식 위원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경영실적 평가를 추진하게 됐는데, 그런데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설치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들의 보건 향상 내지는 연구 이런 등등의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이것을 경영실적으로서 천편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저는 적절

치 않다 이렇게 봐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동감입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평가 편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서 기재부에 처음에 얘기했던 3월 20일까지 다 경영평가 하라는 것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현실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와 관계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런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교육부에서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을 교육부가 덜렁 만들었다고 그렇게 바로 적용할 게 아니라 국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여기에 관련된 여러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가면서 이것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식 위원 첫 번째 시행되는 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평가 수준에서 진행하면서 앞으로 보완하는 방향들을 찾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평가의 일환으로써 기재부가 평가기준도 만들고 해 오는 부분이고요. 다만 소속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인 기관입니다마는.

그러나 교육부가 기재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그리고 또 학술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되도록, 사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에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또 민간이기는 하지만 적십자병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위치와 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이제 세 기관 간에 공공성에 대한 위치 설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국립대학병원의 경영평가도 이러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기재부와 최종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저도 예전에 기재위를 했었는데요. 기재위가 일을 할 때 보면 천편일률적인 게 많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맞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그냥 딱 해 놓고서 이대로 하라고 막 강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황우여 장관님은 부총리이시면서도 실제 장관 아니십니까? 최경환 부총리한테 얘기해서서 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가 좀 더 재량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경영평가나 그 기준 자체는 역시 법령상 기재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동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설훈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용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을 출신의 서용교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자유학기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부산지역 자유학기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죽 한번 둘러 봤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니까 준비돼 있는 프로그램이 지역 간에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농 간,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준비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미미한 숫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혹시 부총리께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직업이 지금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잡히고 있는 직업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1만 1600개 정도 됩니다. 일본은 1만 6000개 정도가 되고요. 미국은 3만 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직업의 숫자가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실제 체험한다면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이라는 게 글로벌화된 경쟁이라는 것, 그다음에 또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을 키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거기부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도 서울과 지방 간에 직업 숫자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다 체험으로 커버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관계기관, 공공기관, 학교기관, 대기업 지금 계속 협약을 맺어 나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가 통계자료 본 것 중에 하나는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한 73% 정도가 전부 다 단발성, 일회성의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70%까지 규모를 늘리지 않습니까? 작년에 20% 좀 넘는 숫자를 시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정부의 제일 국정과제라고 교육 분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초긴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은 이게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일부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폭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70%로 넓히다 보면 이제는 교육부로서는 한계가 있고 교육청이 철학을 갖고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 과목을 깊이 유념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을 꼭 잘 전달 시행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게 교육청별로 구체화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청마다 지금 사정이 다 다를 겁니다. 주어진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조정들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선 현장에서 제가 만나 본 많은 분들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미룰 수 있으면 한번 끝까지 미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일선의 담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 사정을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다음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문에 드러난 사실 중의 하나인데 학점은행제, 우리나라 교육체계 중에 하나로 고등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제도인데 성인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취지를 갖고 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학점은행제라는 게 고등교육의 보완제로 나온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격증을 얻는 데 있어서 50% 이상을 학점은행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꼭 보육교사만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2010년도에 실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학점은행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서용교 위원 그러지 않으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부실화되기가 되게 쉽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배 이상 늘어났지요, 처음에 시작될 때보다? 이것이 매번 다 제대로 지금 점검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학점은행제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을 대하는 학문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학점으로 대면교육이 아닌 학점은행식의, 특히 컴퓨터로 하고 하는 이런 인터넷 교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3월 전에 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월경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학점은행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과 그 문제점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예술교육이 작년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학교당 지원 규모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고 있고, 지금 보면 증가액이 다른 예산보다 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죽 들여다보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대부분 이 사업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예산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기본적인 교과 과정에 대한 것은 일반 재정으로 되는데 특히 예체능 교육에 대해서는 중점 사업으로 워낙 우리가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강화하는 부분을 지금 특교로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줄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음악이나 미술 이런 예능 교육이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든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일반예산 사업하고 상충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두 가지 면인데요.

일반예산이 부족한 것을 한편에서는 문체부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또 하나가 장관이 할 수 있는 국책사업용 특교 예산을 활용해서 보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했고 또 교육 특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혹시라도 예체능 교육에 위축 내지 지장이 있을까 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용교 위원 지금 현장에서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가 다 공히 만족하는 보기 드문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인성교육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래서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서용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설훈 서용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정진후 위원입니다.

장관님, 2월 7일 날 국내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국외에 계셨습니까, 2월 7일 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정진후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쭙 보냐면요, 2월 7일 날 새벽에 대학교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실상의 테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종종 군사작전지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새벽에 군사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2월 7일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상지대학교 총무부장을 필두로 해 가지고 계약직원 3명이 교수 연구실로 들이닥쳐서, 이것 불법 침입이지요. 교수실에 있던 정대화 교수 폭행하고 납치하려고 했던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제가 귀국해서……

○정진후 위원 이것은 명백한 테러 아닙니까? 이런 테러가 어떻게 학문의 전당,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동안에 교육부가 사실상 상지대의 김문기 일가를 복귀시키고 상지대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지대는 이런 테러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학교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제 눈앞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학생이 폭행당해서 계단에 굴러떨어져서 병원으로 실려 가는 현장을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오면서 대학정책실장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김문기 씨는요, 30년 전에도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던 세 분의 교수들에 대해서 교직원들을 동

원해 가지고 한 겨울에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납치 감금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김문기 씨 상지대 복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 근거,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그동안에 ‘임원 간 분쟁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임원 간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원 간 분쟁이 해소되었으니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답이에요. 직무유기를 이런 형태로 변명하고 꼭해해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지대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도 이게 안 되는데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김문기 일가가 학교에 복귀하고 나서 정대화 교수 파면, 테러, 이것은 물론이고 총학생회장, 4명 학생에 대해서 무기정학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리고 작년 특별감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일부 교수들에 대해서 표적감사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인척을 포함한 측근 4명 특별채용하면서요,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했어요. 3급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특히 특별채용된 친·인척 중에 김봉기 씨, 이분 예전에 상지대병원에 근무하다가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임됐던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특별채용하고 있어요, 정관 변경하면서까지.

그리고 이번에 정대화 교수 테러 주도했던 총무부장 남윤경 씨, 김문기 총장 취임 이후에 특별채용된 측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2008년에 총학생회장 매수하기 위해서 서약서 등을 쓰면서 협박했던, 그런 일을 자행했던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채용된 현 총무부장, 이 현 총무부장이 이런 폭력테러에 개입된 사건이라면 이 총무부장을 임명한 총장,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도 책임을 물어 주세요.

임원 간 분쟁을 뻔히 알면서도 승인취소를 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저는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여섯 차례나 그동안에 장관님은 김문기 총장 문제 있다고 답변하셨고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 보여 주셔야 됩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출장 등으로 바빠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거는요 사실상 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답변이셨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답변하시고,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년째 이 사항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긴급처리권 남용하고 한 것들, 책임 물으셔서 상지대에 임시이사 파견하시고요. 학교 정상화해 주셔야지만 저는 장관님의 면목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거론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교육부로서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런 대학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서 지금 엄중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보면서 지금……

○정진후 위원 교육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불법이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일어나고 있고, 그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빨리 서둘러 주셔야지 이런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되는 것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하여간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 겁니다.

○정진후 위원 대학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위원 총장, 사실상 거부사유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 6월에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으로 사유 공개했어요.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문입니다. 왜 재추천해야 되는지 사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문으로 제주대학교에 내려 보냈어요, 교육부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못 하십니까?

제가 2005년 이후에 임용을 거부한 사유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국립대에서, 총 36개 국립대학 임명제청 중에 14번 있었습니다, 2005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6번, 박근혜정부 시절에 7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제주대학교는 이렇게 임용 거

부한 사유에 대해서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사례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사례는 사례가 아니었습니까? '겸직금지조항, 영리행위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 이것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요?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시고요,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아주 비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열한 수단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지원대학 평가하면서요, 총장 직선제 폐지 평가점수를 5점이나 뺐습니다. 그래서 총장 직선제 폐지시켰어요.

장관님, 대학자율화의 요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대학자율화다, 대학자율화다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자율화의 요체예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갖고 올리면 가타부타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당하다면 이렇게 공문으로 회신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총장 직선제 없애고, 이제는 대학 구성원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천하는 것도 지금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무슨 대법원 판례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대학 당국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과정에서 또 장관의 인사위를 거치면서 하는 그동안 교육계의 여러 관행과 해 왔던 업무처리에 따라서 해 왔는데, 조금 있으면 대법원의 모든 정리하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대법원 판결이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나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신성범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후 위원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의 판결이고, 그다음에 왜 제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히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사유를 밝히는냐의 여부에 대한 것이 대법원 판결……

○정진후 위원 이미 교육부에서는 2009년에 사유를 밝히셨다니까요, 공문으로? 그런데 왜 지금

에 와서는 못 밝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때도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진후 위원 아니,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유는 개인 사유이고 지금은 개인 사유가 아닙니까, 이 사유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때는 주민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진후 위원 주민들의 문제는 여기에 언급조차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어쨌든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진후 위원 모든 것을 '소송 중'이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다 대처해 오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 차원에서 밝히면요, 소송은 취하가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진후 위원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왜 그것이 소송까지 가서 법적으로 판례로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될 내용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조금 전에……

○정진후 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대학자율화이고, 그 대학자율화의 요체가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제청을 했으면, 추천 제청을 했으면 그거를 존중하는 것이 대학자율화의 요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알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대법원 판례로 그거를 확보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입장로서는 대학자율화를 존중하는 데는 다름이 없지만 총장 임명절차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로서는 그동안 지켜 왔던, 따라 왔던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이번에 정리가 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가부간에, 좌우간에 국회와 의논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자료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정진후 위원 교육부에서 상지대학교의 정대화 교수 사건 그리고 친·인척 관련한 특별채용 내용, 그다음에 공공기숙사 건립 지연, 이것들에 대

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 저한테도 보내 주십시오, 들어오는 대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부총리님,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교사들을 위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전반기에 마련하셔서 특별법을 만드신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달의 스승상을 한 명씩 주시겠다고 한 것,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남녀 한 명씩 선정해서 주시는 거는 어떤지요? 왜냐하면 상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거고 사기진작이 되니까 남자 분 중에서 한 분, 여자 분 중에서 한 분 해서 선생님들이…… 꼭 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달의 스승은요,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뭐라고 그럴까, 존경을 드리고 모범으로 삼고 선양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인들에 대해서……

○이에리사 위원 아, 고인들에 대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왜 우리 보훈의 달 하듯이요……

○이에리사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분에 대해서는 모범교육자라든지 또 훌륭한 스승,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또 학교 운동부 학생들 보충수업, 방과후 학습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게 지금 또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에리사 위원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사실 학력증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같이 들어가서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함께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고 왔을 때 그 선수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 주시면 어떤가?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도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꼭 참조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부총리님, 그리고 작년 국감 때 제가 학교 운동부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부모들의 어떤 지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챙겨 봐 주십사 했고, 교육부가 지난 12월 30일에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서 챙길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게 일반회계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학교회비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재부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재부에서 받은 거를 잠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답이 왔냐면 ‘학교 운동부 활동은 교육과 직접 관련 있는 필수교과로 보기 어렵고, 형편상 학교 운동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과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할 때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클럽활동 하는 거는 다 공제를 해 주면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어려워서 부모들이 돈을 이렇게 내서…… 들어가는 돈을 제외시킨다라는 게 과연 납득이 가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을 기재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아마 교육부도 알아보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아우성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1년에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지금 한 400억 정도라

고 제가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고 15%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거를 혜택 받지 못한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고 교육청이나 교육부라도 문의를 갔을 텐데,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방과후 학습하고 스포츠 활동하고…… 글썽 오히려 더 해 주면 해 줬지 이거를 제외시킨다는 거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최경환 부총리하고 직접 말씀을 충분히 나누어 주셔서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알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돈을 내고 하는 것도 부모들한테 부담인데 학교 운동부 활동이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방과후 학습 활동보다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또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체육중·고등학교의 미달 사태를 말씀드렸고요. 교육부가 또 꼼꼼히 여러 가지를 많이 그동안에 현장도 나가시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생각도 많아졌고, 진로에 대한 탐색도 다양해졌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아이들한테 호기심이 가고 앞으로 진로에 뭔가 나에게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체육중·고등학교가 상당히 호기심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첫째는 학교에 대한 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대학에 가는 것,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육중·고등학교 문제를 검토해 보시면서 체육중·고등학교의 시설 문제, 학습환경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고 있나, 나아가서는 체육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문호가 많이 열리도록 대학 운동부가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가라는 것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신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사실 항상 인성을 중히 여겼지만 우리

가 소홀히 한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인성수준 검사 인성덕목 구성 내용 이거를 봤습니다. 열 가지 항목이 죽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요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저는 애국심과 국가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 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저희들은 시상대에 서 있으면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나오면 마음이 짠하면서 눈물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내 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국가관, 투철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잘 추진되고 현장에서 좋은 반응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부가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에리사 위원 제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문제도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 대학 얘기들은 사실 합니다. 교육부 입장도 알고, 어쨌든 이제는 학생 수도 줄고, 대학은 많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지난번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할 때의 평가보다 굉장히 많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 강화된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들 어려움은 있지만 특성화되어 있는, 예체능이나 이런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대학에서 잘 펼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건가 하는 것도 차제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체육중·고등학교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래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부분에 애국심·국가관 넣자는 것도 아주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 만들 때 저희가 꼭 참고하겠습니다.

대학평가 부분에 대해서 예체능 부분을 일반대학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꼭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장관님, 학업성취도평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안민석 위원 이 중요한 것을 장관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실무자에게 요청할게요. 결과 나왔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예.

○안민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안을 해야 될 자료입니까? 이거를 왜 안 주지요? 일제고사 확대할지 축소할지, 평가방법에 대한 적절성의 유무, 이런 결과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예.

○안민석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들 게 아니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이 업무를 저희가 최근에 이관을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안민석 위원 아니, 검토 중인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예.

○안민석 위원 결과 나왔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나왔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자료를 달라는데 왜 못 주지요? 국가 보안서류예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그렇지 않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니면 이거를 알면 교육이 비상한 어려움에 처하나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를 놓고서 국회랑 같이 논의도 하고 장점은 장점으로, 단점은 단점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안민석 위원 자료 좀 주라고 장관님께서 엄명을 내리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게 아마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준비과정 아닌가 싶은데…

○안민석 위원 그거를 가공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가공보다도 거기

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같은 것이…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민석 위원 저는 교육부 입장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로우 데이터(raw data)를 보고 싶은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게 있어야지 질의를 하거든요. 그냥 주라고 그러십시오, 장관님.

○위원장대리 신성범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가지고 안 위원하고 상의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안민석 위원 아니, 그거 없으면 제가 질의를 못 하게 생겼으니까 아까부터, 오전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장관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마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나 본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예, 그렇게…

○안민석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빨리 주라고 이야기 한마디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이어서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도종환 위원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언론통제 발언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언론의 자유 또는 언론의 고유한 역할을 정치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상식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구체적인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

○도종환 위원 언론 자유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박지르기도 하고 또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또 돈이라는 미끼로 언론을 흔들기도 합니다.

지금 PPT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핵심정책과제 홍보추진 계획’이라는 교육부 대변인실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자유학기제 관련한 매체홍보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발행부수 상위권 주요 일간지에 기획기사 또 전문가 기고, 그다음에 방송에는 저녁 8시나 9시 메인 지상파 뉴스에 자유학기제의 1년 성과와 과제 보도 또 심야 지상파뉴스 대담 등등 이렇게 해서 신문기사는 1억 원의 예산 또 9시 뉴스에 잠깐 보도되는 것은 2000만 원 또 심야 지상파 뉴스 3000만 원 등등 이렇게 해서 2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홍보 방식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도종환 위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구체적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종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이면서 거의 기사 매매에 가까운 홍보계획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에 대한 홍보 행사를 아마 대행사에 주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안을 검토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홍보는 해야지요. 홍보는 해야 되는데요. 이런 핵심 정책과제 홍보 추진계획이, 교육부에서 작성한 이 계획이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되었나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J일보 사회면 탑에 3일간 이렇게 기획기사가 노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피니언에 서울의 모 대학 김 아무개 교수님의 기고가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거의 그대로 되었어요. 주요 일간지에 자유학기제 관련 기사로 계획되었던 소요예산 1억이 그대로 집행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9시 뉴스에 노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뉴스라인에 대담이 진행되었어요. 거기에는 장관님이 출연하셨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제가…… 이런 것은 정부활동의 일환입니다.

○도종환 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가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능 출제오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마무리할 때 답변하시고, 그리고는……

여기에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출연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로서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교육부의 문건에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도 나와 있고, 여기 장관님 출연하셨는데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장관으로서 통상 언론 인터뷰나 대담 출연을 요청받으면 검토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의 하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문건에 보면 여기 돈 3000만 원이, 거기에 장관님 출연하시는데 3000만 원 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30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주고 출연하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유학기제나 정책 홍보를 해야 됩니까?

자유학기제는 저는 꼭 실현되어야 되고 잘 되기를 바라구요. 또 내년에 전면 실시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장관님이 한 번 나가셔서 몇 마디 대담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출연을 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출연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전 소요관계에 대해서는.

○도종환 위원 그다음에 차관님, 이 문건에 보니까 2014년 10월 13일에…… ‘BH 교육비서관실, 10월 13일, 홍보전략회의’ 이렇게 잡혀 있던데, 10월 13일이면 차관님이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재직하시던 때가 맞지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이때 이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홍보전략회의는 우리 선임 행정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별도로 구체적인 내역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 보고받으셨어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아니, 구체적인 내용까지

는 못 받았습니다. 홍보 관련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도종환 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금년도는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로서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잘 결집해야 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공기업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확산하고 향후 정책 확산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해야겠다’고 필요성이 문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돈으로 확산합니까? 국민들에서 희망을 주는 정책 확산을 위한 동력을 돈에서 찾습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일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일부 시범학교만 운영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도종환 위원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다 공감해요. 그렇지만 이 홍보를 이런 식으로 돈으로 사야 되느냐 말이에요. 거의 기사 매매에 가까운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것이 차관 자신의 언론관입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아니, 여기 BH 교육비서관실 회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까?

○교육부차관 김재춘 아니, 그 홍보 관련된 회의는 저희……

○도종환 위원 다른 부처 홍보 매뉴얼 구해 가지고 봤어요,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하나. 다른 부처 홍보 매뉴얼을 입수해서 보니까 다른 부처에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정책매뉴얼 같은 것 보세요. 돈으로 기사를 사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부는 왜 이렇게 합니까?

자유학기제가 중요하다는, 목적을 중요시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다 보면 과정도 중요한데 과정은 소홀하게 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가 되고,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도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었

고요. 또 강은희 위원님도 외부 기관과의 협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청하고 원활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지적은 지적대로 잘 새겨듣고……

또 지금 현재 교육청, 시·도 교육청, 시·군 교육청별로 담당 장학사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도 않아요. 진로교육을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공한 장학사들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학생지도를 전공한 장학사들이 겸임을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게 사실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학교 현장에서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이러면 이런 것들도 잘 챙기고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돈 들여서 무조건 잘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전국으로 확산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유념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잘되는 것인 양 기사를 매매하는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 저는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홍보방식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언론기관 간의 금전거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시정하도록 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아주 정말 소중한 우리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委員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니세요? 그런데 아직……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맞습니다.

○柳在仲 委員 그런데 여기 ‘장관’이라는 명패 찍혀 있으면 바꿔야지, ‘부총리님’이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그래도……

○柳在仲 委員 여기는 또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소관부서가

장관이니까요.

○柳在仲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총리’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지금 질문할 때? 나는 지금 ‘부총리님’이라고 불렀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장관이라고 불러주시지요.

○柳在仲 委員 장관님으로 부르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柳在仲 委員 아, 그렇습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장관님,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2014년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을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柳在仲 委員 성인 2000명 중 정부 교육정책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사람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1.8%가 줄어든 8.7%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15.4%를 포함해서 부정적인 응답이 56.2%, 이렇게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마는 참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어떤 정책이 현실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참여 부족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이렇게 불신을 받아서야 제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의지가 있는지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신불립’이라고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가 따르지 않으면 도무지 실현될 수도 없고 정책으로서 존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 점에 대해서 늘 자중자애하며,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그리고 협의하는,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도 금전과 연관시키는 정·재계의 강행이나 유도가 아니라 정책 자체로 승부를 거는 자세로 해라, 이렇게 지금 간곡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柳在仲 委員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교육인데, 교육에 대한 정책의 불신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과 반목, 갈등, 우리 국민

인성·의식이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맞습니다.

○柳在仲 委員 지금 딱 보면, ‘어떻게든지 상대를 잘못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잘못되도록 하고, 도에 어긋나게 여러 가지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막 이슈화를 만들고 사회의 어떤 갈등 비용과 불신이 팽창해서 삶의 행복에 문제가 되는데……

또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도도 역시 18%에 그칩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서로가 불신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할 교육부의 정책은 신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런 것 봤을 때,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지만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하나의 정책이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지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저도 취임하고 인사말씀에 ‘신뢰받는 바른 교육이 장관으로서의 모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柳在仲 委員 이러다 보니까 또 나오시다마는 교사들의 직업만족도, OECD 보고서에도 작성된,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이 27%, OECD 회원국은 한 구점 몇 %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충격적인 연구결과입니다.

심지어 다시 직업을 선택하면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비율이 높고, 이렇게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교사,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느낌을 찾지 못할 정도로 자부심도 못 느끼고,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옳은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수도 없이…… 공교육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히 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지금 바로 세울 단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방대 말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의 첫 회의가 열렸지요? 지난 12월 22일 날 열린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

방대와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범정부적 위원회가 늦었지만 출발하였다는 것은 가장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이 한 지방대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 수도권 대학은 지나친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지방대학은 노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지난 장관님이.

부총리님…… 아니, 장관님, 이거 참 심각합니다. 저도 오늘—죄송합니다—오전에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의 축사를 하는데 보니까 지방학생이라고 그랬으니 수도권 대학에 몇 명 갔느냐 이걸 굉장히 사랑해요. 전공이 필요 없어요, 수도권 대학. 서울대학에 몇 명 갔느냐, 거기에 학교평가가 나오고 학생들의 기가 죽고 이런 사실, 이러니까 무엇이……

여러 가지로 어떤 비용과 사회의 발전, 미래의 발전을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하나 하는 생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출발부터 수도권 대학에 가는 것, 성공, 낙오자로 찍히는 것, 자기 전공을 떠나서 학교를 보고 무조건 가는 것 이런 것도 문제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생기고 꿈과 끼를 발산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자유학기제도 선행학습 문제로 해서, 학원들도 선행학습의 광고를 많이 하는 것 보면 문제가 되고, 학업 따라가기 선행학습, 각 학원에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대로 해서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큰 어떤 국민의……

부모님,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는데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떻게든지 수도권으로 가려는 비용, 수도권으로 보내 놓으면 지방 부모들은 또 허리가 휘지요. 방 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근사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在仲 委員 이것은 정말 다른 무엇보다

도…… 수도권은 교육정책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건 자연스레…… 아까 전임 장관이 이야기 했잖아요. 프리미엄을 받고 잘되고 있으니까…… 지방대학은 노력했는데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임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뿐만 아니라 밑에 해당 국장님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분 안 줍니까? 이상 끝낼까요?

○위원장대리 신성범 다 끝났습니다.

○柳在仲 委員 알았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신 부분이 지방대 문제인데 지금 나름대로 지방대가 또 특성화를 해서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필두로 상당히 우수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직도 사교육 시장이나 여러 주변에서 이것을 왜곡시키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일체 학원이나 또 학교 자체에도 ‘어느 대학 뭐 합격했다’ 이런 플래카드 같은 것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권고도 있고 해서요.

또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법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을 계기로 해서 취업률도 오히려 높아지고 또 오히려 많은 지원이 가고 그래서 경인 지역 대학들이 지금 오히려 역차별받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 장관님 때보다는 하루하루 많이 달라진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재의 채용 문제를 중심으로 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갖고 있는 교육철학 중에 교육을 통한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좀 봐 주시지요.

이런 것 흔한 풍경들인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글씨는 좀 멀리 있지만.

이게 취업보다는 대학에서 하숙하고 월세방 구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청년들이 현실은 미생이지만 꿈은 다 완생들인데, 새 학기만 앞두면 방구하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입주에 성공한 대학생들은 축복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울상을 짓고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월세방을 구하고 있는데.

1월 28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대학생 월룸 거주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42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고 평균 보증금은 1418만 원입니다. 그 이상의 월세 부담의 경우도 훨씬 많았어요. 43%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냥 놔둬서만은 안 될 것 같고. 또 학생들이 높은 월세방 구하는, 월룸 구하는 것의 경비의 80%를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관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주거권, 학습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신성범 간사,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 겨우 반값등록금 완성의 해니까 이제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특히 주거권, 학습권 이 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지금 나름대로 대학마다 기숙사 짓는 붐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윤관석 위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반값등록금 실현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인 것은. 그런데 그거 다 된 다음에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맞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기숙사 수용률이 지금 보니까 전체 학생 대비 16.34%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붐이라고 하는데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기숙사를 늘려 가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해 주시고.

또 보증금 월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 대학가에. 여기

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문제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숙사비도 등록금 납부 기간과 겹쳐 있어서 부담이 더 가중되는데 당사자들 얘기 들어 보면 카드 납부나 분할 납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것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것 갖고 분할 납부하느냐 하지만 학생들 아니겠어요, 또 등록금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말정산 중에 기숙사 비용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도 검토를 아울러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카드·분할 납부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올해 아주 굉장히 강력히 권고안을 만들어서 합리화하고 있고요. 기숙사비, 교육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수능-EBS 연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중장기 수능 개편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장관께서 지난 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나가서 답변하신 게 EBS교재-수능 연계율 하향조정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에 대한 개선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이것이 지금 70%라는 체감도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연화……

○윤관석 위원 그러면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계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유연화 내지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윤관석 위원 유연화라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하향에 대한 유연화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향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부로서는……

○윤관석 위원 이 성과는 인정하시지요, EBS하고 수능 연계했던 것의 그동안의 성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것 추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관석 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발표를 보니까 수능강의가 가구 소득 수준이 낮고 지역 규모가 작은 소지역일수록 사교육 대비 수능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점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당사자들은 연계하는 것들이 현재 적절하거나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부가 판단하는 것이나 정부측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물론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기계적인 문제 풀이 방식으로 간다든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EBS 수능이 갖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 성과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살려 나가도록 강화 내지 현행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립대총장 임명 지정 거부는 다 질의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소송 중 장관’ 이렇게 닉네임 붙지 않도록…… ‘소송 중’이라는 얘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제 거의 끝나 갑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 가지고 ‘소송 중 장관’으로 지금 별명이 붙게 생겼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부임한 후에 지금 뒤처리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인데 잘 정리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1월 26일 날.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작년 12월 달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달라졌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제도 유지가 최선인지 검토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부분은 지금 2018년 전후로 한 여러 가지 지수 변화에 따르는 그리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이 고정됨으로써 재정이 여의치 않을 때 나오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합리화하고 선진화하자 그런 취지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지만 지금 정부가 공약한 누리 과정을 대표로 해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학생수 감축—학급당입니다—이런 교육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교육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또 지방재정교부금도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해서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것을 시사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한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난리가 나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설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일부는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하고 또 일부는 확충할 수 있는 데는 확충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교육감과 또 우리 교육계의……

○**윤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부도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지 않고는 건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관석 위원** 그래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통합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윤관석 위원** 그것은 아니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통합 문제는……

○**윤관석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 감소, 이것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부로서는 아직 그런 점을……

○**윤관석 위원**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학생 수 대비 학급 수 기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은 학생 수로 하는 게 아니라 학급 수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데 이것을 그냥 학생 수로 해서 하향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얘기해서 검토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신 있게 교육부장관으로

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직언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2018년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그리고 또 2020년이 되면 학급당.....

○윤관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 이따 답변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위원 지금 연세대 인천 송도캠퍼스의 청소직 직원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계약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파악을 해서, 사립대학 이런 데서 발생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방치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교육부가 실태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주지하시다시피 2018년이 되면 통계상으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그다음에 2020년이 되면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기준을 다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반응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달했고, 또 한편에는 늘 한 3조 정도 늘어나는 교육재정이 작년을 필두로 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선진국형 재정구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에서는 너무 부족하게 되고 한쪽에서는 또 재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하는 부분을 양면에서 다시 한 번 적정화, 합리화, 효율화, 선진화 이런 모습으로 검토하자라는 것이 지금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교부율을 25%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부율을 그러면 하향 검토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부율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면 교육재정은 좋아지는데 내국세의 다른 부분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윤관석 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 게 하향조

정을 검토하는 것처럼 들려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요, 예를 들면 고정, 선진국형 재정으로.....

○윤관석 위원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해서 교부율을 하향조정하겠다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책이지요, 보완책요. 그러니까.....

○윤관석 위원 그것은 이따 또 보충질의 때 하고요.

송도캠퍼스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니까 고정적인 교육재정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송도나 이런 각 대학에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보니까 사실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중요시되지 않아 가지고 저도 유감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의 일환으로 이것은 범정부 체제하에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검토를 하려고 그러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은 초·중등교육에서만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윤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상지대에 대해서 좀 여쭙 볼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상일 위원 아직도 학내가 안정이 안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악화되고 있지요?

교육부가 작년 11월 24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궁금한데 왜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도 여러 차례 독촉을 했는데요. 그게 우리 업무가 많이 밀려

있는데다가 대충 60일을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금주 내로는 마치겠다고 감사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악화하고 있다면 장관님 대책은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이 대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학이라는 점에서 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법적인 절차와 법적 사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진정 국면이 아니라 아주 대소사 간에 여러 문제가 자꾸 분규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상지대가 지난 1월 6일 전임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사용을 해서 임기만료된 이사 4명을 연임하고 다른 분 5명을 신규로 선임하겠다고 해서 취임 신청을 교육부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상일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일단 감사가 중심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이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임기 만료된 이사 4명, 이분들은 이미 상지대가 지난해 11월 상지학원에 이분들의 임원취임 승인 신청 반려했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이사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승인을 반려한 사람들을 또 신청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조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뜻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알기로는 정관을 고치고 그래 가지고 그 하자를 치유하고 다시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이상일 위원** 그런데 그 정관 고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관 고치는 것은 좀 눈가림으로 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

작년에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보면, 그 네 분 임원취임 승인 신청 반려한 것을 보면 사립학교법 제20조2의제1항제2호 당해 학교운영에 중요한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된 이런 등등의 사유로 신청을 반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법 내용을 보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거든요. 그러면 제25조를 보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게 빠른 해결의 방법 아닌

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은 법률 절차상 임원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임원 자체의 자격을 승인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시정명령을 하고 거기에 불응해서 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이런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이 부분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일 위원** 상지학원의 구재단 측이 긴급처리권을 자꾸 사용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진짜 긴급처리권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긴급처리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남용하는 인상을 줄 경우에는 학내가 더욱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분규가 생길 텐데, 교육부가 너무나 방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물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러나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빨리, 속히 해결해서 학내를 안정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우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발점을, 지금 감사가 나갔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속히 결론을 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감사관실이 교육부 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금주까지는 매듭을 짓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아마 이 문제는 여론도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고, 담당 감사관도 잘 아실 겁니다. ‘사회 정의가 뭐가?’ 이런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새해 업무계획 보고하셨을 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 여성 인권유린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사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혹

시 아시나요?

한국일보가 지난 1월 말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7개 학교 중·고등학생 61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3년에 나온 일본의 고노담화에 대해서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정답을 맞힌 학생은 35%……

제가 그래서 교과서를 좀 두루 살펴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 8개 교과서 가운데 일제 동원 사실 간단히 설명하고요. 현재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교과서가 2종 있습니다, 지학사와 리베로스쿨.

그다음에 교학사나 비상교육, 이 2종은 일본이 고노담화 정신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다른 교과서들은 또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다음, 중학교 교과서 9개 중에 고노담화에 대해서 쓰고 있는 교과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교과서 분석을 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과거 일본의 만행과 우리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아무리 축소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한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교과서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교과과정 내에 교과서 집필기준 만들 때 꼭 넣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뿐만 아니라 정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존중감을 함께, 그리고 인류에 만행이 다시는 없도록 꼭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집필기준에 넣겠습니다.

○이상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이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광주 서구갑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중 위원님께서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

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에 대해서.

그런데 장관님, 그 법이, 2015년부터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대한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로부터 받아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원 계획을 받고 검토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박혜자 위원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아직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아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박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계획을 제출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로부터 앞으로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받아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요즘 지역에 혁신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지요? 그래서 중앙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최근에 개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령 지역균형인재라고 그래서 2014년도에 100명을 했고요. 올해 같으면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목표율로 30%를 정하고 있어요.

또 가령 공공기관은 그 지역 인재를 몇 %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

○박혜자 위원 정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지방에 내려간 공공기관들 전부 다 신규채용을 할 때 35% 이상 그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시·도지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10% 채용하도록, 15% 채용하도록 말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게 되면 그 지역 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장관께서도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데가 많아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학교, 대학에도 35%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국무회의에서 행사부장관을 비롯해서 각부 장관한테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의 지금 말씀, 특히 이 법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간곡히 전달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말 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홍보계획도 전면적으로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넘었으니까 이미 자치단체들이 법령에 규정된 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점검하셔야 되고요. 또 점검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실에도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내년도, 2015년도 대입 전형이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닌데, 대체로 끝나가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의대라든가 한의대라든가 약대라든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출신 입학생 현황 자료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직은 우리가 취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제 2월, 거의 마감이 되면 입시는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인재들이 정말 법령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입학 관계가

매듭이 지어지면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학에 대한 비리라든가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표명해서 교육부가 사학에 대해서 걱정을 안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특히 사학의 재정·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지난해 11월 26일이던가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정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립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이외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마련되었던 그 유의사항하고 작년에 제시되었던 유의사항이 전혀 달라요.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16개 사항 중에서 14개 사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어요. 장관님 보셨어요, 그 유의사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한번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한번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볼게요.

○박혜자 위원 제가 너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들면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해서 차입 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이 개인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럼요.

○박혜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빼 버렸어요. 삭제했어요.

또 장학금 등 허위 지출, 혹은 공사비의 과다계상 지출로 공금을 유용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삭제되거나 다 변경됐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거 제가 지금 보고받았는데, 다 원위치 시켰답니다.

○박혜자 위원 원위치 시켰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아니, 작년 11월 26일에 그랬는데요. 법정부담금의 교비회계 부담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정감사 때

지적까지 했는데 요 사항도 빼 버렸어요.

도대체 그러면 사학에 대해서 ‘재정·회계를 앞으로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예정인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전부 다 재정·회계 기준 유의사항 자체를 빼 버리거나 다 삭제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배경을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저는 그 실무자를 강력하게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님 말씀대로 다시 원위치 시켰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러나 이런 정책적인 혼선을 제기한 실무자는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자초지종을 한번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혜자 위원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세상에 16개 기준 중에서 14개 기준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의 회계감사 기준을 이제는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사학재단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서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까지도 그렇게 오히려 그 유의기준에서, 지침에서 빼 버리는 것…… 장관님, 장관님 모르게 그렇게 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최종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알아보고 그 결과 보고를 아주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보다 더 공정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학비리 중에 재정·회계 부분에 대해서 엄정성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박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갑의 이종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박근혜정부 교육 분야의 비전이 꿈과 끼를 살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는 박근혜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진로 교육, 체험활동 중심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2013년에 1%의 중학교에 시범 도입했고, 2014년에 25%, 올해는 50%까지 확대 도입하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종훈 위원 내년에는 전면 시행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50%가 아니라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종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올해 70%까지 이렇게 확, 엄청 늘어나는데요, 작년까지 25% 도입해서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나 준비 부족이나, 앞으로 전면 도입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피드백 받으신 게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아주 핵심은 인프라……

○이종훈 위원 인프라의 핵심은 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인프라라는 것은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이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이하는 데가 준비 부족이 될 경우에는 교육이 부실해지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다 학교로 화하다시피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한 충분한 질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종훈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러면 결국 학교가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전담교사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사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진로 교육을 하려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와서 강의도 해 주고 체험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 지원이 절대적

으로 필요한데 MOU 체결 현황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제 지역구만 제가 직접 조사를 해 봤는데요. 3개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도입했는데, 낙원중학교라는 데는 MOU 체결을 하나도 못 했고요. 양영중학교라는 데가 다섯 군데, 하탑중학교라는 데가 여덟 군데…… 하탑중학교가 여덟 군데면 굉장히 잘한 것에 속하더라고요.

장관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고 잠월드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환경일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하탑중학교가 8개라지만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제 지역에 있는 중학교 MOU 체결을 하는데 외부기관에 연결도 해 주고 그럴 생각이지만, 시골 학교는 정말 심각할 것 같은데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천에 3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하나도 체결 못 했어요. 체결해도 농협, 우체국, 경찰서, 이게 조금 답답한 지경인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채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슨 시설 만들고 그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은 교육지원청마다, 지금 아주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학교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이종훈 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너무 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럼요, 그것으로 인한 교육의 질에 차이가 생기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지원 센터에, 지원청 안에 하나의 부서를 뒀서 거기에 연결하면 거기서 대행해 주다 시피 하는, 그래서 연계점을 확보하는데, 그래도 지원청에 있는 지원 센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계속적인 상부의 MOU를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리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공적기관에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공적기관 말고 다른 곳으로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래서 전경련하고……

○이종훈 위원 다 공무원 만들 것도 아니고요, 학생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전경련에 포괄적인 것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각 산하기업, 그래서 공공기관 외에 경제·사회·문화, 특히 문화 쪽이 중요한데 이것은 문체부가 앞장서서 범정부적인 지원을……

(김태년 간사, 설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훈 위원 저도 제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이미 어느 학교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사실 굉장히 귀찮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득하는 과정과, 1개 기업이 여러 지역의 학교를 같이 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학부모들이 결국 학원으로 돌릴 거고 사교육만 다시 판치게 하는 실패한 공약이 될 텐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만큼 그것이 현장에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MOU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지도교사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누구 한 분만 선정해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분이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인드와 또 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토론식도 그렇고 체험 중심 교육도 그렇고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교육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봤더니 7시간 인터넷 강의가 다입니다. 이게 인프라에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1년 하고 말 게 아니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 전담교사를 한 분만이 아니라 몇 분 더, 이런 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철저하게, 저는 1년 해도 다 안 되고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면 그 혜택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설훈 예, 1분.

○**이종훈 위원** 몇 년 후에 후배들한테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관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아주 적절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들의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그에 대한 숙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 양성 단계부터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적 호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또 정부로서는 갑자기, 이것을 맨 처음에 50%만 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는 열화와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70%로 늘려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부를 비롯해서 걱정이 많지요, 정부는. 그래서 지금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도 세우고 그랬나 봅니다마는 국민의 호응이 제일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에 저희가 더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훈 위원** 장관님께서 1분을 다 쓰셔 가지고……

됐습니다.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이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우선 상지대 문제 좀 여쭙 보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금주 중에 감사 결과를 정리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에 쌓아 놓은 것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두루뭉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장관께서 진짜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바라고 계신다면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다면 해법은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오늘 그 해법을 한번 제안해 볼 테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부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두 번의 문서가 있지요. 11월 달에 낸 상지학원 임원 취임 승인 신청 반려 공문, 그다음에 올해 1월 16일 날 사분위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임원 간 분쟁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아세요? 2013년도에는 상지학원에 임원 간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교육부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 자료에 나와

있으면 교육부가 인지한 겁니다.

○**박홍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육부는 어떻게 했느냐? 상지대 구성원들이 2013년도에 총 열세 번에 걸쳐서 민원을 넣습니다.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학교의 정상적 학사 운영이 어려우니까 관할청이 개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초기에는 무슨 소송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송이 13년도 7월 18일 자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사회가 총 일곱 번 무산됩니다. 총장 선임도 안 되고 학교 현안 처리도 다 안 됩니다. 심지어 학교법인의 감사까지 교육부에다가 상지학원 이사회 운영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어느 학교 감사가 우리 학교 문제 있으니까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는 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은 ‘이때 당시에 임원 간에 분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우선 교육부에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장관께서 정확하게 당시의 교육부의 이런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우선 진상을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제가 해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도 당시 2013년도에는 임원 간 분쟁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임원으로 계셨던 분들 다섯 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동덕여대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동덕여대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인 세 분의 임기가 2009년에 끝나는데 그런데 교육부가 3개월이 지난 9월 달에 임기가 이미 끝난 임원 3명을 임원 취임 승인취소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합니다.

당시 사법부도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교육부가 승소를 한 거지요—‘이번 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처분 당시 임원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된 자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 얘기는

뛰나 하면 다섯 분에 대해서, 당시 2013년도 소위 학원의 임원 간 분쟁 시기에 있었던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종료되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두 번째, 이분들 이후에 정상화 시기, 이번에 또 사분위에 제출하면서 2014년도 3월 이후에는 임원 간 분쟁이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17일 자 공문에 아까 우리 이상일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운영에 중요한 장애를 야기했다고 해서 임원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즉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임원 취소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부 스스로 공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교육부에서 첫 번째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후라도 반려가 아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화가 됐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17일 날 반려를 했던 그 시기에 임원 취소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선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임원 승인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긴급처리권 처리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조선대 사례 같은 경우 아까 언급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임원 취임 승인취소에 해당되는 분들이 결정을 그동안 내려온 겁니다. 이런 긴급처리권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왔고 또 이들이 결정했던 임원 취임승인 신청, 지금 열아홉 분의 명단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소당해야 될 분들이 결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동안의 이런 동덕여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좀 다시 임원 취임승인 반려가 아니라 취소로 우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시이사 파견해서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총장 문제를 접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위원회에도 좀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상지대 문제네요, 2013년도의 교육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임원 취임 승인취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우선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이것이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구성되는……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육부가 그동안 해 온 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 이따가 더 추가질의를 하겠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대화 교수 문제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경찰 조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조사가 1차적으로 끝났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은 아는 것처럼 지금 야간에 다수가 폭력에 의해서 실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심하게 위반한 거예요. 특수도 여기에 당연히 따를 겁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도 지금 이것은 계류 중인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지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조사에 덧붙여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한번 장관께서 직접 교육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추가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실제로 교직원들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냥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수사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홍근 위원** 그와 별개로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폭력을 일삼는 것을 그냥 교육당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시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박홍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선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뭐 교육부장관의 직접 업무는 아니겠습니까마는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서울지역 353개의 초등학교에서 9시 등교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발표를 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자기네 학교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뒤늦게 알게 되고 뭐 이래 가지고서 받을 동동 구른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교육부에서는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보셔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중고등학교 단위로 해서 교장들이 문제시 됐을 때 당신들의 입장을 나름대로 정해서 채용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개입할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이것을 강행하거나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들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권한 내에서 학부모와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했느냐 이 부분만 지금 교육부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같은데요. 강요할 성질은 아닌데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특별한 행정조치를 하시라든지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이런 혼선이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학부모들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전에 소통을 하시고 그러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참 이것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이 여러 가지 보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낮지가 않은데 교사 된 것을 후회한다는 게 20%이고 지금 OECD 국가의 1위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의 입장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사의 사기 진작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에는 또 연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지금 아주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하여튼 머리만 싸매지 마시고요. 장관님 계시는 동안에, 정말 교사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스승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장관님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선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는데요. 지방교육재정이 이것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이 계셨고 이것에 따라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장관님 입장도 이것을 축소할 그런 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는 제 소신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교육재정은 확충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희선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이렇게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우리 인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희선 위원** 교육의 힘이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아낀다든지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교육투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해는 교육세 제도가 도입된 82년 이후에 보니까 IMF 직후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년, 이렇게 총 세 번인데 금년이 특히 세수 부족이 더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과연…… 우리 부총리께서는 해결을 하셔야 된다, 무슨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이렇게 퍼센티지만 유지해서 내국세에서 받겠다라는 것 말고 뭔가 불요불급한 그런 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무슨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여러 가지 학생수 재배치에 따르는 교육투자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신 다른 데는 공동화되는데 그러한 효율화가 중요하고, 또 좀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 위원 그것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고 또 도시 개발하고 하는 데서 학교는 계속 짓고 또 이러면서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학교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서초지역만 해도 지금 고등학교가 한 군데에 몰려 있고 그래 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는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서 원거리 등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같은 데를, 특히 국공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학교 이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재정의 효율화 차원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이전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함으로써 적정 학급수와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럴 때는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통폐합할 때는 우리가 강력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우리가 한 350개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와 같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아주 대규모로 일어날 때는 사전에 교육당국과 교육 쪽의 협의

를 마쳐달라, 그래서 그 완급을 조절해야지 딱 교육재정은 일정한데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행사 쪽에서, 국토 쪽에서 계속 개발한다고 학교를 지어라 그러면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김희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증세 문제 또 복지 문제가 지고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 가지고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차제에 우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위한 교육재정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지금 과연 우리가 아낄 부분은 뭐고 더 집중 투자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안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2013년도인가 이연호 교수가 복권상품 개편방안 연구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복권에서 내집마련복권, 교육복권, 세계일주복권, 통일복권 이런 복권을 발행할 경우 우리 국민들께서 구매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교육복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인 답을 주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복권 같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신탁 문제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복권 부분은 재정 당국이나 관련 당국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김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지방교육 행·재정 운영혁신추진단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김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장관계 16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이 고용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처우도 제각각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부총리로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달라고 당부를 드린 바가 있었고, 장관께서 강사 직종을 총괄하는 부서를 교육부 내에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학교강사대책팀’ 신설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배재정 위원 먼저 약속 지켜 주신 장관님께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학교강사 문제를 풀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강사대책팀 팀원 구성이 아직 다 완료는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과 사무관 1명만 배치되고 팀원들은 아직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강사대책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스포츠 강사 문제도 그렇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 시간제 전문상담사분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빨리 팀을 꾸리셔서 학교 현장에서 쫓겨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강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현재 인원이 워낙, 우리 교육부 인원 아시잖아요. 그래서 3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각 부서가 협조하도록 해서 출발 부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학교강사대책팀에 거는 기대가 큰데 구체적인……

그러면 지금 팀 구성이 3명으로 완료가 됐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과 보완계획 등이 완성되는 대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배재정 위원 그리고 오늘 지역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만 부산지역 학교 10곳 중 7곳이 석면 학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지역 1026개의 유치

원·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70.9%에 해당하는 727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가장 높은 곳 같은 경우 85%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육부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별 학교 석면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결국 관건이 예산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도 석면이나 라돈은 이제는 학교안전시설 예산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배재정 위원 저희가 추산을 해 보니까 1개 교실의 석면 텍스 제거 비용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시교육청의 입장에서 부산의 경우만 보면 초·중·고교의 석면 텍스를 제거하는데 2600억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감에서부터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늘 걱정들이 많으신 게,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큰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배재정 위원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하기 참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제가 지난 국감 때 학교 노후시설과 관련해서도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것은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다. 사고가 난 뒤에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고 나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예산 탕을 한 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석면 대책 또한 일선 교육청에만 맡겨 두면 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정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학교의 석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주 적절한 말씀이시고 그대로 동감합니다. 이것 계획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꼭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심각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어제도 사실 법안 상정 회의 때 제가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우리가 법안소위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차관께서 제가 대학교육연구소가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해서 첫째 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89.4%가 지역대학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차관께서는 3주기 평가로 보면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더 보니까 2022년까지 3주기 평가로 보더라도 결과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모의평가 결과에서 부산지역 4년제 사립대학 입학정원은 2022년에 2014년 대비 41.2%의 감축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전 40.7%, 경남 40.6%, 전북 40.2%입니다. 반면 서울은 28.2%, 인천은 29%, 이렇게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수도권보다 다른 지역의, 특히 부산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중장기로 가면 수도권도 상당히 감축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걱정이 아니냐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지역의 대학들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아까 지역인재 균형 육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그 심각성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대학이 죽고 나면 어떻게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우리가 같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률이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을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저도 이 문제가 제가 장관 되어서 제일 크게 고민하는 것인데, 우리 국내 학생만으로는 아무래도 지방대학이 선택에서 후순위로 밀리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 전체를 국제화하고 그리고 지방대학을 강력히 지원해서 그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특성화하고 또 지역인재에 대한 유인

책을 자주 마련하고 이러면 국내·국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적 자원이 충족될 것이다, 그래서 꼭 폐쇄나 문 닫는 방법은 최악의, 그것은 대학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마지막 수단이고 우리 정부나 특히 교육부는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보다 대학의 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중반기 전에는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짤 때 배재정 의원님 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어제 법안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적절한 안을 내놓지 않고 의원입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려는 방법은 정도가 아니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급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정부도 많은 의견을 다시 제안하고 수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거기에 보다 충실한 내용을 각 위원님들이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많은 손실을 지방대학이 보았다 하는 것은 아마 재정 제한 대학 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배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준 위원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도 결론적인 말씀을 결과적으로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안이 잘못되었다……

법인 재정 관련 지표, 교지확보율, 이게 처음 안에는 있었는데 왜 삭제되었습니까? 교사확보율도 7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고……

이게 전부 지방대학에 유리한 것이 불리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교지확보율도 지방대학이 유리

합니다. 그리고 교사확보율도 지방대학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재정 관련 지표도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보다 상당히 유리한데 이 3개의 지표 중에, 원안에 있었는데 2개가 없어져 버렸고, 항목이 없어져 버렸고 교사확보율은 7점에서 5점으로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에 유리한 학생충원율이 5점에서 8점이 되었고 졸업생 취업률이 3점에서 5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방대학 죽이기 위한 지표가 되었다……

그 위원들이 어떤 위원들입니까? 실명 공개하고 그 회의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평가안을……

○안홍준 위원 회의록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아마 지방대학이 불리하게 수도권대학의 로비를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원들은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대학이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저희가 지방대학 나올 때는 사실 SKY 대학의 한 2개 대학보다는 저희 국립대학이, 부산대학·경북대학에 사실은 커트라인이 한 1, 2점 높은 과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한 10여 개 대학 밑에 있는 대학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일류 주립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립대학도? 일본에 가면 각 분야의 노벨상들도 지방 국립대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대학, 특히 국립대학 수준이 형편없이 지금 이렇게 열악한 것은 우리 교육부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물며 그런 거점대학, 국립대학조차도 그랬는데 사립대학은 어떻겠습니까?

이 평가항목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권한을 지방에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인재 아닙니까? 인재는 그 지역의…… 대학 구조조정해야지요. 그러나 지방은 지방대로 거점대학이 있어서 거기 출신들이 졸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

이 워낙 예민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서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하는 안을 받아서 이것을 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그 대교협이라는 것도 지방대학보다는 수도권대학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또 지적을 하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평가에서 결과가 70~80% 이상이야 아마 지방대학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좋지 않았던 비수도권대학들이 지난 4년간 기존 평가 지표에 맞춰서 개선점을 많이 찾고 개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지표의 평가자료 기준 시점을 최근 3년으로 설정해서 꾸준한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평가지표의 주요 항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 지표, 등록금 부담완화율 지표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평가항목이 생겼을 때에는 향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야지 과거 평가에 의해서 그동안 전부 준비해 왔던 대학을 새로운 평가 잣대로 옛날 것을 다시 보겠다고 그러면 대학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측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준 위원 어느 대학 측이요? 지방대학 측이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방대학 주로 그런……

○안홍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이것 2015년의 항목을 보면 이렇게 주요 항목들이 다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수도권대학에 유리하게 만들었던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건데 장관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세세한 것은……

○안홍준 위원 차관님은 청와대에서 교육비서관

을 하셨는데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부차관 김재춘** ……

○**안홍준 위원** 그 명단 공개해 주시고요. 회의록 다 주시고, 회의록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주시고 해서 문제 있는 위원들은 사실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입한…… 수도권과 지방 구분을 했습니다, 일부. 그리고 권역별 평가지표가 전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것도 구분은 했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도 교정한다고 그렇게 교정지수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홍준 위원** 또 가산점도 최대 3%인데 예를 들면 연평균 취업률이 감소하지만 않아도 1%를 주고 가산율에 다시 획득점수를 곱해서 가산점을 주면 점수 차가 줄어듭니다. 가산점이 자구노력을 반영하기에는 이것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성평가 점수 차이가 정량평가 점수 차보다 변별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정성평가가 변별력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로비력이 약한 지방대학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개혁 평가가 정원 감축의 근거 자료가 되는데 감축 방식도 대학정원 규모를 고려한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은 정원이 한 3, 4만 이상 되지요? 그렇게 됩니까? 그 정도 되지요, 큰 유명 대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안홍준 위원** 지방대학 몇천 명…… 3만여 대학에서 1000명 주는 것하고 5000명의 정원에서 1000명이 주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소규모 대학……

○**안홍준 위원** 그 5000명의 정원에서 1000명이 줄면 지방대학 문 닫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율로 해야 됩니다, 비율로. 5%를 줄이면 5000명인 대학의 5%, 3만 명 정원의 5%, 이렇게 비율로 해야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현재도 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규모

대학은 그것을 비율로 해도 대학의 존립 문제가 걸린다 이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안홍준 위원**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생이 2020년이 지나면 정원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폐쇄도 해야 됩니다. 그런 대학은 고등학교, 옛날 공전 같은 5년제 맞춤형 교육을 해서라도 전환을 하게끔 교육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구조조정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벌이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80% 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그것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방의 거점대학은 육성을 해야 될 대학은 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정성검사를 해서 지방대학에 불이익, 또 이 자료, 평가항목 자체가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님과 차관님께서 이것을 한번 분석해서 지방대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거점대학의 육성이 지방대학도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지방대 육성법과 맞물려서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이 차별받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안홍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유기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기흥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안홍준 위원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요지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대학평가에서 지방대학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평가 또 특성화대학에 대한 평가 자료를 달라고 국정감사 초기부터, 그리고 그것은 제 개인 요구가 아니라 위원장님까지 포함한,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요건을 갖춰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자료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도대체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국회

법에 따라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요건을 갖춰서 했는데도 국정감사 때 자료를 안 냈는데……

지금 안홍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주실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하여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기흥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실무자의 답변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뭘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말 뭐 어떻게 가공해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저 자료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도 아까 장관님 답변에서 ‘저 자료를 주겠구나’ 하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장관님,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글썸, 이런 회의록이나……

○유기흥 위원 아니, 아까 회의록 말고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가지고 내부 검토를 많이 거쳤는데 대학에 대한……

○유기흥 위원 아니,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달라는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내부 검토를 해서…… 그러면 검토해서 안 준다고 결정하면 안 주는 겁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안 주고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내부 검토해서 준다고 그러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이것은 대학 서열화와 이것이 만일 공개될 때의 그 파장 때문에 그랬는데……

○유기흥 위원 아니, 그러면 국회법이 왜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려면 와서 보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주면 그 후에 우리 교육부에 또 여러 가지……

○유기흥 위원 저는 그 문제를 위원회에서 고발 조치 안 한 데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아니, 그것은 옛날 얘기고……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입니다.

○유기흥 위원 줄 겁니까? 그것도 민감하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민감한 내용이 아니고……

○유기흥 위원 그래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지난 1월에 직제가 바뀌면서 이 업무가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부총리께 아직 미처 보고가 안 돼서 보고드린 후에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흥 위원 확실히 주는 거지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추가해서 한번……

○위원장 설훈 예.

○안홍준 위원 사실은 부총리께서 국회법을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국가 안위에 뭐 안 되는 몇 조 이것을 제가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학의 서열화 문제는, 서열화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학원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서열화는?

이게 평가나 그것 한 게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게만 되었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누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왜 어느 대학은, 능력 있는 대학은…… 여기에서 이렇게 불이익이 있고 이렇다 하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이제 행정이 그렇게 투명해야지요.

회의록이라서 공개 못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발언하고 평가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안민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은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틀이지요? 이 5·31 교육체제를 이제 개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교육부 내에서……

○안민석 위원 TF팀이라도 만들어졌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것 하는 것이……

○안민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가을은 되어야 되겠다고 그러네요.

○안민석 위원 이 정부 반환점 돌고서 끝날 때쯤 되어서 아마 시행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장관님이 취임하시자마자, 특히 작년 4·16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러면 4·16 참사의 교훈을 받아서 교육체제의 근본을 바꾸는 그것을 약속하셨고요. 이것이 지난 연말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올 가을쯤에 나온다? 올 가을쯤에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요. 어쨌거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만드셔야지요. 장관님께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뒤의 실장한테 ‘언제 나오냐?’ 여쭙어 보시면 장관님,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황우여 장관님의 그런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가는 애석함을 느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맞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위원 이것 빨리 좀 만드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또 교육부에서 하는 인력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제가 강요를 못 하는 것이……

○안민석 위원 지금 올해 5·31 교육개혁이 20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만들어질 때가 됐지요?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안민석 위원 차관님이 잘 좀 도와주세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 우리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 개정임무를 떠고서 차관님이 날아 오셨다고 우려들 하는데 그런 것 논란 일으켜 가지고 쑥대밭 만드시는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개혁의 틀을 새로 짜는 것, 20년 지난 것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21세기판 4·16 이후에 한국교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판을 새로 짜는 것을 장관님 도와서 열심히 잘 짜세요. 저

희 야당도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지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을인데 빨리 좀 하세요. 더 빨리요. 가을 전에 혹시 또 부총리님 내려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지 마시고 좀 잘하세요.

그다음에 부총리님도 관심 가지고 하시는 인성교육 있잖아요. 이것 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학부모들, 교사들 다 찬성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수반돼야 될 텐데 전체 예산 중에서 인성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0.1%밖에 안 돼요. 54조 교육예산 중에서 겨우 500억 좀 넘어요. 말로만 인성교육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인성교육의 핵심이 뭐니까? 인성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이들 예체능교육 열심히 시켜 가지고 인성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안민석 위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안민석 위원 그런데 0.1% 예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수영 같은 경우에 이것 해 보니까 아이들 인성교육에 아주 최고예요. 그런데 겨우 예산이 50억이에요. 그런데 177개 교육청 중에서 71개 교육청이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됐어요. 이 기준이 있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실 예체능교육에서 수영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177개 교육청 중에서 71개 교육청만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 50억만 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 개수와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마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안민석 위원 아마 나름대로 그런 것이 없었을 겁니다.

자,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학교체육이 중요하다고 네 번이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학교체육, 초등학교 체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스포츠강사가 희한하게도 대통령이 학교체육을 강조하셨던 13년부터 해마다 1000명

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전의 대통령은 학교체육의 ‘체’자도 안 꺼냈어요. 그때는 2007년부터 12년까지 스포츠강사 계속 증가했는데 대통령이 학교체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1000명씩 줄어들었어요. 웃기지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도, 재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것 늘려라, 여야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다음 PPT에 보세요.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없애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장관님, 지금 핸드폰 보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요, 자료 좀……

○안민석 위원 저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못 받았습시다.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저 사업 없애라’ 그랬는데 위원님들은 아주 그냥 기를 쓰시고 ‘저 사업 저것 좀 잘해 보자’라고 말씀하시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걸 국회를 농락한 거예요. 장관님 보고받지 못하시고……

실무자, 저것 언제 보고를, 공문 받았어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공문을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안민석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저 공문을 언제 아셨어요?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저요?

○안민석 위원 예.

○교육부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어제 이것 회의에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어제 알고…… 그러니까 이게 뛰엿장수들도 이렇게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13년 12월에 저 공문이 떨어졌어요. 진짜 웃기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저 스포츠강사 대책 마련, 정말 인성교육을 실천하시려고 그러면 저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올해도 1000명 또 줄어야 됩니까? 기재부는 올해 다 없애라 그랬어요.

장관님, 저 대책 좀 빨리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교육부로서는 저게 기재부를 통한 문체부 예산으로 우리를 지원해 왔던 것인데 저것이 그냥 뚝 끊어졌어요.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부 재정, 지방재정으로 도저히 어려우니까 재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안민석 위원 대책 마련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개학이 구정 지나면서 개학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문체부도 지금 기재부의……

○안민석 위원 그러니까 개학 전까지는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스포츠강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안민석 위원 빨리 대책 마련하셔서 국회에, 의원님들께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자유학기제 말씀하셨는데요, 자유학기제 핵심이 지자체가 학교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안민석 위원 시설과 인적 인프라를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벽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사진이 나와서 좀 그런데, 며칠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시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토론회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오산시하고…… 아까 보니까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MOU 맺는다고 그랬는데요.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교장선생님들보고, 교육청보고 ‘지역 가 가지고 MOU 맺어라’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

지역단체에서는 시청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이 지자체하고 MOU를 맺도록 장관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MOU를 맺는 교육청에게 격려를 해 주시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리면 우리 여기 교과위 위원님들, 여야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이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구에 이 일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나서서,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정도 움직일 사

람은 국회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오산 저 좋은 모델을 본떠 가지고 저렇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맺으면 장관이 교육부에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하면 자유학기제 준비도 잘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자유학기제 말이에요. 나와 보세요. 자유학기제가 뭔지 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시의원들, 도의원들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저렇게 먼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면 장관님이 특별히 교부금도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드는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교장선생님들보고 저것 하라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죽었다 깨어나도 저것 하실 수 있는 교장선생님 별로 안 계세요.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 지적도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교육부로서는……

○안민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또 제안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안민석 위원 제가 작년에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어느 학교를 가 봤더니 거기는 1학년 전체를 뮤지컬을 일곱 반을 다 가리켰어요. 그래서 학기말에 7개 반 전체가 뮤지컬을 공연을 하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아주 울음바다가 되더라고요. 정말 뮤지컬이 이렇게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아이들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주호 장관 때는 엘 시스템 오케스트라를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우여 장관님 계실 때 한번 엘 시스템에 버금가는 전국의 뮤지컬, 이것을 자유학기제로 연동시켜 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이들에게 출연하게 하는 이것을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저희 의원실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도와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알겠습니다. 이런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이 늘 앞장서 주셔서 길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자세히 만들어서 또 의원실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안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일 두바이에서 열린 현지 교민과의 간담회에서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외에 설립된 한국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도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한인학교의 전향적인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한인학교가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교육시킬만한 내부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재외한인학교, 한국교육원 회계·인사·복무 등에 대한 긴급실태점검이 저는 아주 대단히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현지에 나가 있는 교장 그리고 또 원장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공식적인 공무원으로서 우리는 공무원인데 비자는 대개 취업비자라든지 민간비자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나름대로 지금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외교부와 함께 노력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학용 위원 이게 꽤 인기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내부에서요?

○김학용 위원 예,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선발을 거칩니다.

○김학용 위원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자칫하면 교육부의 사각지대화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한국학교 또 한국 교육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학교가 15개국에 31개교 그리고 한국교육원이 17개국에 39개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교장 그리고 원장께서 회계, 인사, 복무에 대한 전횡이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부 지도감사 결과자료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대만 카오슝한국학교 교장은 본인 마음대로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기 배우자를 임용을 하고 또 교비회계를 학교장 개인 통장으로 혼용 관리하면서 이자를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않는 등 그런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또 2011년도 시드니한국교육원에서는 원장이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를 교비회계 운영비에서 횡령을 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관운영비, 사업비를 교육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회계장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작년도 상반기 조사에서도 보면 이 회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학교장 마음대로 교원을 선발하고, 심지어는 관용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주유비를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이 근무기강해이한 사례가 아주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매년 한 300억 정도, 그리고 지난해에는 336억 원의 국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부정비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원인이 어디에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무래도 국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해이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아주 엄중 처분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적정화에 노력을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엄중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부 학교장 교원이 퇴직을 하면 그냥 그걸로 문책을 하지 않거나 또 경고나 주의조치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강력한 그런 처벌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니까 이게 상하관계 걸쳐서 사전에 이렇게 통보하고, 1년에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10곳 이상으로 늘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칙조항도 강화를 하고 또 그리고 예고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감사를 해야 효과가 있지 예고하고 다 준비한 상태에 나가 가지고서 감사하는 것은 실효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앞으로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 외국에 지금 저희가 나가 교민간담회 하면 이 한인 학교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의 질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인원이 적어 가지고 제대로 그 학교를 못 가는 그런 교민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에 나가 있는 교육기관의 신뢰가 무너지면 저는 대한민국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면 불시 점검도 하고, 이런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한국학교 그리고 한국교육원의 기강해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올해는 한 스무 군데 정도를 불시 감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민으로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체제가 잘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최근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고서 막말을 일삼는 교사 문제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지금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살인자’ ‘양아치 두목’……

저는 그래서 이것이 대남방송에서 남한을 헐뜯을 때 쓰는 그런 말인 줄 알았더니 도대체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비공개 특별채용을 통해서 교사로 임명된 윤 모 씨라는 분이 이런 행위

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를 떠나 가지고 이런 분이 교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 하고, 국민들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사를 채용할 때 정말 전형일정을 비공개회의 하고, 이것을 당사자에게만 통보해 가지고서 뽑는 이런 것은 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비공개 특별채용을 특정인에 대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수준으로 상향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학용 위원 2012년도에 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자신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 모 씨 외에 2명의 교사를 비공개 특별채용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때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학용 위원 지난해 12월에도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2명을 비공개 특별채용해서 교육부에서 부랴부랴 임용 취소를 하는 등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다 떠나 가지고 지금 교직을 이수하고서 선생님으로다가 봉직하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렇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교육공무원법 제 10조제2항에도 나와 있지만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정말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졸속 검증 또 편법을 이용한 특별채용을 사전에 막고, 이 특별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인 대책을 꼭 장관님께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그러면 유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

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두 군데 차관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교체가 됐어요.

장관님, 부총리이시기도 한데 문체부 김희범 차관이 갑자기 사표 내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뒷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가 잠시 한 달새 국제회의에 갔다 오니까 되어 있어서, 타 부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유기홍 위원 혹시 김신호 전 차관이 무슨 사의를 표하거나 아니면 교육부 후임 차관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상의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오시는 차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만두시는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평소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사가 좀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의를 표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압니다.

○유기홍 위원 글썄, 직선 교육감 출신 점잖은 분 모셔다가 갑자기 그렇게 교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김 차관님, 대선 때 캠프에서 교육공약 준비하는 데 참여하셨지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오늘 자유학기제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고교 무상교육 공약 만드셨잖아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유기홍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고교 무상교육을……

○유기홍 위원 왜 시작도 안 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여전히 공약은 살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 형편이 워낙 어려워져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얼마 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윤관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줄이겠다는 뜻으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은 시작도 못 했는데, 학급당 학생 수 줄이겠다고 하는 것도 제대로 시작도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지요? 그

것도 청와대 계실 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 원고 직접 쓰셨나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유기홍 위원** 왜요? 왜 적절하지 않아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아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유기홍 위원** 아니, 청와대도 있었고 지금 교육부차관인데 왜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아니, 그리고 앞으로 무슨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문하면 ‘아,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지금 청와대 계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 이제 교육부가 청와대 직할 체제로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제는 청와대를 떠나서 교육부이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유기홍 위원** 저는 정말 납득 못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그런 태도 이제 안 됩니다.

○**교육부차관 김재춘**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약속 안 지키신 것 또 오늘 업무보고에 포함조차 안 된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약속 안 지키신 것이 또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홍 위원** 그런데 그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약속을 못 지키고……

○**유기홍 위원** 실태조사도 안 했어요. 아니, 국감 때 약속하셔서 놓고 실태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금 경북지역의 돌봄전담사들이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쟁점을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직 보고 못 받았습시다.

○**유기홍 위원** 바로 그겁니다. 경북의 돌봄전담

사 712명 중에서 단시간근로자가 612명이고, 무기계약자들 17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초단시간근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홍 위원** 이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출발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악용될까 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단시간근무제 폐지하고 무기계약 전환 요구하는 파업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책임 느껴야 됩니다. 해결하시겠다고 하고, 4대 보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하고서 약속 안 지키고 그 사이에 실태조사조차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공무직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사회부총리라는 분이 계속하셔서 되겠습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오신 차관도 계시니까 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얘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요.

수원여대하고 동구마케팅고 직원 보복 징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수원여대가 사무직원 14명을 파면시켰는데 이 소식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홍 위원** 작년 11월 사학 비리로 수감 중인 이재혁 전 총장의 측근들이 총장과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로부터 두 달 후 이 전 총장에게 반대했던 노조 소속 사무직원 14명에 대한 보복 해고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홍 위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수원여대가 비리 총장이 횡령하고 6개월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봉 처분만 내린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서 그것을 지적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14명을 이번에 대량 해고한 겁니다.

바로잡으셔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홍 위원** 그리고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공익

신고 교사 다시 해고된 것도 얘기 들으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제가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내부의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공익 제보한 사람을 해고시켰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는데 일과 시간 후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인 행정실장은 그냥 두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교사는 두 번이나 지금 해고를 시켰는데 이것 역시 바로잡아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제가 지금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정말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이신……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장관님께 가지고 있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며칠 전에 설훈 위원장님 주제로 국립대 병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아까 말씀들 많이……

○유기홍 위원 가뜰이나 공공의료가 취약한데 돈 많이 벌어서 오라는 식으로 지금 편람 만들고 있고, 편람 만드는 과정에서 회계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만 있고 의료전문가는 다 배제된 상태에서 편람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기홍 위원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뜻이 없거나 또 의혹이 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다만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 자체가 굉장히 심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교육부는 교육부의 목소리도 함께 내고 또 우리에게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스스로 또 대안을 만들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예산 때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교육부 소속에 대한 것만 예산 배정이 어렵다라는 재정 전반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가 약속을…… 제대로 잘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늘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돌봄전담사의 파업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도 받고, 필요시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수원여대와 또 동구마케팅고의 교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보고를 또 받아 보면서 나중에 유 위원님하고 의논을 나누겠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설훈 유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된 지 오래됐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생리 문제도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설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창식 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인성교육이 교과 커리큘럼에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성이라는 게?

결국은 인성이라는 게 교육인데 실지 학생 스스로가 교사와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연극이나 동아리를 통해서

아니면 뮤지컬이나 이런 음악,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인성 교육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니면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이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지 말아야 될 뉴스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국감 때마다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저는 그 리액션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교육부에.

‘학교’라는 드라마를 한 번 지원했는데 돈 20억 고작 내놓고……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KBS ‘학교’ 드라마 이후에, 학교 교권이 달라지고? 20억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국감 때마다 얘기해도 예산이 없다는 등…… 여기 담당 계십니까? 홍보 마케팅 담당 계세요?

그것을 지원을 못 하겠다고,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시고. ‘학교’ 드라마 하나가 학교에 얼마나, 학생들한테 소위 말해서 왕따나 교권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뒷전이고, 다들 집에 가서 좋은 드라마는 다 보고 계시지요?

학교 드라마 하나 만드세요. 장관님,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가지 홍보 차원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식 위원 예술학교, 그러니까 예술영재학교도 하나 추진하는 게 지금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영재학교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잘 되려면 예술도 같이 스크럼(scrum)을 짜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술인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서 배워 와서 지금 학교 뒷골목의 2층에 5명 앉혀 놓고 애들 가르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예술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예술학과나 보면 커리큘럼이 지금 3, 4년이 똑같아요. 뽑는 인원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칠 곳이 없는 거지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외국의 어떤 학부를 졸업해야지만 대학에서 인정을 해서 학생을 가르칠 자격도 얻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에 영재예술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분교를 해외에 세우는 그런 DNA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류가 전 세계의 심금을 울리고 있을 때,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이럴 때 그런 것 만들어서 이 정부에서 만들어서 씨를 뿌리고 다음 정부에 이게 완성이 되더라도 그런 교육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것……

장관님, ‘국제시장’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봤습니다.

○박창식 위원 눈물 흘리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도 좀 흘렸는데 제 옆에 사람이 더 많이 흘렸습니다.

○박창식 위원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 흘리고 계시더군요.

그렇듯이 그런 드라마가 처음에 기획이 나왔을 때, 시놉시스가 나왔을 때 거기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잘 만들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잘 만들었습니다.

○박창식 위원 잘 만들고 나니까 온 국민이 지금 1000만이 넘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로요. ‘별에서 온 그대’ 나올 때 난리쳤지요. 한국의 제작산업 8억밖에 못 벌고 중국은 3000억을 넘게 지금도 계속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육 안에서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힐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게 우리의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이 가난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해서 가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에는 올 가을에 지상파에서 아주 멋진 한류 드라마, 킬러 콘텐츠 드라마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 교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교과서 문제고 뭐고 다 포함해서 눈 녹듯이 녹습니다.

그런 것을 왜 안 하시려 그러지요? 그것 돈 크게 안 듭니다. 돈 많이 들어야 50억 안쪽이에요. 그것으로 환경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바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창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선진국 전문대학을 보면 수업연한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더 이상은 지체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수업연한 다양화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전문대 졸업생들이 산업역군으로 수십 년 동안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왜 총장으로 바꿔 줬습니까? 학장으로 두지 왜 총장으로 바꿨어요? 그것 누가 바꿔 냈어요, 그것을? 대학교 학장이 돼야 될 것을 총장으로 바꿔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학부도 일부는 2년이 아니라 3년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학과? 4년제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지요.

예를 들면 음식 요리하는 게 4년까지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또 미용 같은 것 2년 배우면 돼요. 그러나 명장이 필요한, 4년이 갈 수 있는 뭔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지요.

왜 교육 선진국을 운운하면서 이런 시스템은 지금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까? 4년제에서 이것을 반대하겠지요, 전체가 4년제로 올까 겁이 나. 그런 눈높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게 지금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대학과 또 대학과 여러 가지 학과 영역 또 겹치는 부분에 대한 조절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창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대학이 있는 과가 다 4년제로 갈 수는 없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물론이지요.

○박창식 위원 저는 부분적이라고 봐요. 그것을 또 4년제에서는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4년제 대학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당히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이런 것도 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냈지만 이게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산업역군에서 일하고 있는 그네들의 자부심도 올려 주고, 학교가 전문대학이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면 다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려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특히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연극이나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예술영재학교 부분도 그동안에 예술학교 자체가 영재학교라는 개념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각이 안 됐는데 과학영재학교 또 최근에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복합 영재학교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창식 위원 그래서 올 연말에는 좋은 드라마 하나 만들어서 장관님하고 교육부 관계자들하고 함께 가슴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텔레비전 앞에서요.

○박창식 위원 이런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설훈 박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동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감사합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총리 청문회가 있어서 참석을 사실 이렇게 늦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런 드라마가 아마 잊혀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 의식에 대해서, 제2의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안전 교육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 안전 교육 표준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까, 이경희 국장님?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이경희** 이번 달에 완성됩니다.

○**염동열 위원** 완성되지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안전 이렇게 많이 얘기하다가 세월이 1년 가까이 되면서 많이 잊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안전 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고 특히 부총리께서 현장에 직접 가 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몇 시간씩 달려서 가서 꼼꼼히 몇 시간씩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안전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안전 표준안과 어떻게 연결하실 건가를 직접 이렇게 보시고 점검하셔서 사실 감사한 마음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잊지는 말아야 할 세월호의 교훈을 가지고, 다른 부처는 사실은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불을 다시 한 번 땡겨 주십시오.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셔서……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100중 추돌이 났어요, 영종도에서. 그리고 신축 공사장에서 매몰이 돼서 7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이 소식을 들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안전 의식에 대해서 상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의 삶의 기준이 과거에는 빵이었던 시대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인권, 민주화가 삶의 하나의 기준처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삶 또 행복한 삶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 가는데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안전한 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의 삶의 척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교육부만 움직임을 보여서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하루빨리 이렇게 매뉴얼이, 이번 2월 달에 발표한다 그랬지요?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이경희** 예.

○**염동열 위원** 발표하셔서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이렇게 현장에서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학교라 그럴까, 안전체험학교 이 부분도

전국 곳곳에 거점을 만드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총리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태백 세이프타운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그래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나름대로,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주도하셔서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또 거점에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전학교와 안전 의식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짜고 있으니까 되면 염 위원님께 우선 보고드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사실은 세월호라는 엄청난 참사 비극을 거치면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염동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태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출장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괜찮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법안 심사 한 번 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말 혼쾌하지는 않지만 현장의 혼란과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법안 심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몇 가지 조항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받으셨을 텐데, 내일모레 다시 법안 심사가 재개가 되는데요. 사전에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그리고 상지대 관련해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 간 분쟁이 장기간 있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는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한 정이사들이 2014년 3월에 사임을 했고.

그런데 교육부는 이 사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임원 간 분쟁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어불성설이지요. 그리고 교육부 직무유기지요.

만약에 경찰한테 ‘폭행하고 있는 현행범을 잡아라’ 이랬는데 구경만 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지금 폭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폭행범하고 그것 누가 보더라도 특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상지학원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원취임 승인이 다 취소됐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었어요. 그리고 임기 만료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이 있었는데 이 임기만료 이사들이 이른바 긴급처리권을 적용해 가지고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임시이사 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교육부가 주장합니까? 판결도 있어요. 판례도 있습니다. 임기만료 이사들에 대해서 서울고법 판결은 ‘2013년도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처분 당시 임원인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된 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임승인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고요. 지금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해도 마땅한 그런 상황인 거지요.

또 이들이 행사한 긴급처리권에 대해서도 판례가 있어요. 2006년도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그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 간 분쟁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교육부가 아주 고무줄이에요, 그냥 적용하는 게. 2013년 7월에 조선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 이사들이 이사정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긴급처리권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2009년 2월에 세종대 후임 총장 선임 요청에 대해서도 총장 선임이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벗어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상지대에 한해서만 매우 관대합니다.

장관께서 김문기 총장하고 무슨 특수관계에 있습니까? 의심이 가는데요. 아니면 다른 모처로부터 ‘상지대 엄격하게 처리하지 말라’, ‘지금 김문기 총장체제 그냥 봐줘라’, 이렇게 요청이라도 받은 것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상지대하고 교육부하고 무슨 특수관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닙니다. 지금도 감사 나갔고 이제 감사 결과 보면서 이러한 모든 법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저도……

○김태년 위원 비리로 쫓겨난 사학의 전임 이사장 이분 안 계실 때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지고 아주 민주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던 학교인데 이분들이 다시, 비리재단들이 다시 복귀함으로써 학교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부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빨리 이사취임 승인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해서 조속히 상지대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이따가 한번 종합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관련해서요.

공무담임권 제한하면 행정행위지요.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놓고 ‘행정행위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시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아까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셨어요. 관행? 아까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데 2006년도에 총장 임용제청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검증한 결격사유에 대해서 밝혀 줬어요. 그래 가지고 4개월 만에 총장 다시 임용제청해 가지고 학교가 정상화됐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시간 끌지 않았습니까, 다 밝혀 줬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부산대…… 2007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하여튼 이주호 장관 할 때 예요, 정확하게 했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대도 임용제청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다 밝혀 줬어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해요. 본인한테도 안 알려 줘요.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개인적 비위 사실 때문에 임용제청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분들이 개인적 비위 사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다른 사유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옆의 차관, 답변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을 줬습니까, 청와대에 계실 때, 경북대·공주대·방송통신대?

○**교육부차관 김재춘** 보고받은 바가 없고 지침 준 바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교육부를 관장하던, 교육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관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교육부차관 김재춘** 제가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 국립대학이 장기간 총장 임용이 안 되고 있었는데, 공백 사태가 있었는데 뭐 하셨어요, 청와대에서?

○**교육부차관 김재춘** 저희가 교육부에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침을 준 적도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청와대의 지침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 놓고 2년 몇 개월이나 끝던 한체대 말이에요, 여당 정치인이 올라오니까 그것은 또 즉각 임용제청을 해요. 그분이 무슨 체육을 전공하기를 했어요, 학위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속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총장 임용제청 거부하고 여당 정치인 출신은 올라오자마자 즉각 승인신청하고, 무슨 국정을 그렇게 속 보이게 합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사립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소송이 아주 복잡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저희도 나름대로 착실하게 따지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하신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리 해석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

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검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곧 종결이 되면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교육부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조속히 대학이 정상화되기를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이 반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소송 중에 있는데 그 핵심이 이유를 고지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 고지 자체를 지금 중도에 하기가 어려워져서..... 다행스럽게도 곧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최종적으로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미를 주셨으면 하고,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올라온 것은 대학 자체가 1순위로 해서 올라와서 거기는 인사위원회도 별 문제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세 대학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장관 책임 하에서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박홍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홍근 위원** 지금 여당 간사께서 안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 도중에 여야 간사들께 또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전 이사장과 당시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처벌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지대 문제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2월 임시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상지대 문제만을 별건으로 해서 청문회를 꼭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양쪽 간사들이 협의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가지고 2월 임시회 중으로 청문회 또는 별도로, 정 안 된다면 상지대 문제만 놓고 현안보고 날

짜를 따로 잡든지요. 이것 하나 다시 한 번 답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저는 청문회를 기본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학교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서 산업용 전기료보다 낮게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의문 채택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장님이 보다 분명하게 양 간사님과 상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설훈** 알겠습니다.

주질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질의 끝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지대학 관련해서 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상지대 감사가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 작년에 그때 마쳤습니다.

○**위원장 설훈**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위원장 설훈** 12월 11일 날 끝난 감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 1월 중에 정리를 마치고 아마 심의는 2월 2일부터 해서 2월 6일 이렇게 하면서 심의를 어렵사리 했노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설훈** 부총리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다마는 12월 11일 날 끝난 감사 결과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직무해태 정도가 아니고 설명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상지대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가 내리고 있는 이런 주저함과 이상야릇한 이런 내용들은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일입니다. 황우여 장관 스타일하고도 맞지 않고 교육부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일에 대해서, 상지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굵뜨게 하고 있는 것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아무리 모처에서 얘기가 왔다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 ‘그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정말 큰 일 난다, 큰일 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못합니까?

나는 절대로 교육부가 이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결기를 세우셔서 교육부의 권위도 세우고 이 정부의 권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지대 문제로 인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곤욕을 겪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까?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지가 지금 두 달이 넘었습니다. 석 달이나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또 상황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무력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다시 추가 감사 해야 합니다. 임원승인 취소하고 그리고 임시이사 파견함과 동시에 추가 감사 또 들어가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문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청문회도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상지대 문제 정도는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설훈** 잠깐만, 제가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육부를 위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시간입니다.

○**김태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지금 자꾸 ‘감사결과 보고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감사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국회에 보고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자꾸 감사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이미 감사 전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운영이 안 됐다, 이사 간에 분쟁이 심했다, 그래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다 밝혀져 있어요, 감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미 사실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것 가지고만, 감사 결과에 관계없이 그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이 규정 이것을 적용해서 교육부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하다

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감사 핑계만 대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까 차관 답변과 관련해서 하나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와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 앉아 계시면서 대단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립대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이 장기간 공석이에요, 공백이에요. 그러면 교육비서관이 공공기관의 장이 장기간 공백이고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부에 물어봤을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 국회에 와서 답변이라고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기관의 장이 그렇게 장기간 공백 상태고 임용제청이 거부되고 언론에 막 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다.’, 국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위원장 설훈 차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김재춘 교육부에서 제청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표현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제청이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인사위원회에서요?

○교육부차관 김재춘 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교육부에서 안 올라갈 수가 있나, 인사위원회에서부터?

○김태년 위원 뭐요?

○박혜자 위원 교육부에서 인사 승인제청을 아예 안 했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담아서 장관이 조속히 매듭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몇 번이고 심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 부분은 우리 교육부 내부의 문제입니다마는 대개 한 두 달은 걸리는 편

이다 해서 이제 그 결론이 날 때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에 모든 법률 문제를 검토해서 일괄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하는데 그 사이에 불상사가 자꾸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부분은 지금 교육부도 아주 고심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속한 어떠한 타개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설훈 생각의 시간이 아니고 결단의 시간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위원장 설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도종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설훈 보충질의는 다들 신청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위원 장관께서 의사진행발언 안 나오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하도 많아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알겠습니다.

○유인태 위원 아까 유재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발의 의원 중의 한 분인 박혜자 위원께서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에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지원 확대의 성과로 이 육성법 제정과 이를 통한 지방인재 채용 확대를 아주 꼽았더라고요, 성과로다가. 그런데 이번에 이 시행령에서 35% 이상 채용했을 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35%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한하는데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2015년 2월 초에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그러고, 35% 이상 채용한 기업 현황에 대해서 산자부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예 이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

요. 그러니까 이것 법만 통과시켜 놓고 사실상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 12월 22일 날 이 위원회 첫 회의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20명 위원으로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1차 회의를 하는데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산자부·노동부 차관은 하나도 참석 안 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실 자체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직은 몰랐습니 다마는……

○유인태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작년 1월에 통과된 것을 교육부에서는 성과라고 작년 업무보고에서 해 놓고는 실제로 35% 이상 채용한 공공기관·기업 현황 자체가 있지도 않고, 아무 데서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위원회에 이쪽 기재부나 산자부, 노동부에서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부총리이시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시고 하니까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부총리로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구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논제로 삼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태 위원 그러니까 말만 이 법이 통과됐지 실제로는 지금 사문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계장관회의도 여섯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인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유치원에서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된 게 어린이집이 274건이고 유치원이 94건인데 어린이집이 4만 3000개고 유치원이 8600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2배 정도 유치원의 아동학대 신고가 더 많은데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2012년에는 15건이던 게 2013년 36건, 2014년 94건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2012년에는 1건, 2013년에 2건, 작년에 94건인데 3건에 불과해요.

상담원이 신고받고 나가서 조사한 사례판정소 견서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어요. “아동 및 아동 아버지의 진술을 확인하고 CCTV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동 담임교사는 아동을 도구(식판, 캔, 실내화) 등으로 때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밖에도 아동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등이나 머리 등을 때리거나 팔을 꼬집는 행위 등이 확인됨. 그리고 아동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두 아이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행위가 있었음. 또한 아동이 간식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장시간 동안 밖에 세워 두는 등의 행위가 있었음.”,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행정처분 대상도 아니고 이 교사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얼마 전 어린이집의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유치원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거의 사각지대이고, 이것을 조사를 나가려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복지부 저거라 지자체에서도 해 주는데 여기에 상담원이 나가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도 거의 협조를 안 한대요, 유치원에.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지자체도 별 협조를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유인태 위원 이쪽의 그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이 더 앞장서야 됩니다.

○유인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유인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학점은행제가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증가하지만 관리는 부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59만 명이 넘게 학습자가 등록했고 또 28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다.

2008년부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567개인데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훈련기관에 반해 점검 대상기관의 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지금까지 평균 점검비율이 13%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불이익 또는 비싼 수강료 지불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데는 2년 이상 연속으로 지적 받은 기관들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침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놀랍게도 시험문제 및 답안 사전 제공이라고 합니다. 교육기관은 공정성이 생명인데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점은행제 학부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수강생이 몰리자 교육과정을 위탁해 운영하던 대학에서는 위탁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K대학이 부설 평생교육원 내 학점은행제 학부를 맡아 운영하던 위탁업체들에게 수수료 5 대 5 분배 요구라든지 제반 비용 강제 떠넘기기, 인기 프로그램 베껴서 학과 개설하기 등 평생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과정을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갑질행태에 대해서도 이게 뭐 건설회사인지, 대학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학점은행제에 대해서는 주질의에서도 나왔듯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곧 세워지니 그때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또 하나, 제가 아까 사립대학 교육기관, 전국 160개 국공립 사립대학에 ‘청소년노동자 근로조건실태’를 하나씩 직접고용이 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부의 공공부문의 일반 비정규직’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또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거기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사립대학에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의 경우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표준계약조건 대책 마련도 요원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같은 데도 계약조건을 할 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겠다고 그렇게 계약서를 해 놓았어요.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정하고 나서는 일방

적으로 근로조건이 변동이나 저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따로 다룰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발주 당사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전체의 정책문제 이전에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아동학대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많은 대책을 내놓았고 관계 회의도 했는데 올해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한 것 보니까 아동학대 대책이 처벌·규제 일변도에서 지난 시기에 나왔던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CCTV 설치 확대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조치, 대안 없이 폐쇄하면 또 2차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부모들이 사고 난 데들을 오히려 ‘폐쇄보다는 다른 대안을 세워 달라’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참가하는 운영위원회 설립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교사들의 인성교육, 이런 어떤 간단한 대책들도 전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현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고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성회계 법안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저희도 법안소위에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물론 교육부의 불가피한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어땠는지 입법의 취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과 또는 교직원들의…… 특별하게 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입법의 타당성들을 좀 더 근거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윤관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논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정부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윤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후 위원 제가 오늘 질문 꼭지가 16개인데 지금 세 번째 합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요청드릴 때, 말씀드릴 때 올해 39개교에 달하는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국제중 평가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잘 아시지요? 제90조, 제76조 특성화중학교, 1부터 4까지는 즉시 지정 취소 사유들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에 5년마다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해서 평가한다, 지정목적을 달성했는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러면 5년마다 평가한다는 것은 앞서서 1부터 4까지는 즉시지정 취소사유들이고, 다섯 번째, 5년마다 평가한다고 그랬으니까 5년 평가한다는 것은 5년 내에 걸쳐서 한 2개 연도를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5년 전 기간 동안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위원 역시 국제고등학교, 또 외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도. 그런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외교·국제고·국제중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부적절한 행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반영했는지의 여부, 이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부적절한 행위를 다소 하였으나 시정조치등을 통해서 개선 노력을 한 경우’ 이 경우는 ‘보통’으로 평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입니까? 법을 위반했으면 이게 평가

에 제대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게 보통으로 들어가고, ‘다소’ 했더니요? ‘다소’는 제가 알기에 부사인데 형용사, 이런 것들을 꾸미는 말이지요. 그래서 뜻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거거든요. 법을 위반하면 위반한 거지 무슨 ‘다소’ 위반했습니까? 이게 평가지표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4항 입학전형 부정, 이것을 조장한 행위를 이런 형태로 무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항목 봐 주세요.

선행학습 방지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다소 벗어나 출제하였으나’, 교육과정을 위반하였으면 위반한 것인지 무슨 다소 벗어나서 출제했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은 나중에 제정됐으니까 이것은 예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다소 벗어나 출제했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평가지표들을 왜곡하지요?

그다음 또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위반이 어떻게 저촉되는지 이걸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 2009년 교육과정 총론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다음 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외고·국제고 입학설명회 및 진학상담 시 부적절한 행위를 다소 하였으나’ 입학설명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다소’ 했다는 말이 뭘 말입니까? 이게 평가지표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정진후 위원 아니, 사안이 경미하다니요? 각종 인증시험 성적이나 각종 자격증, 이에 준하는 자료, 이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불법 중에……

○정진후 위원 불법이면 불법이지 부적절한 행위가 무슨 ‘다소’예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설립목적에 위반돼서 운영되어 오던 학교를 봐 주겠다는 심산이 아니면 이런 평가지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장관님.

또 볼까요? ‘정규 교육과정에 자연계 과정의 대준비반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개선을 한 경우, 이것은 보통임’ 아니, 이런 학교들이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가 설립할 때 의대준비반 설립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허용된 규정이나 법이 어디에 있어요? 위반됐으면 위반된 사실대로 별점을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개선하는

것은 그다음의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2013년에 성적조작, 금품수수, 회계부정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됐던 영훈국제중 같은 경우 그대로 재지정되게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이런 평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 28개 지표 중에서 문제지표가 10개예요. 법 위반, 교육과정 위반, 이것들을 무마시키는 것 3건, 평가대상 학교 요구를 받아들여서 평가지표를 낮춘 것 2건, 판단기준에는 미흡했으나 노력 등 개선을 했으면 보통 점수를 부여해서 사실상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 5건, 이대로 평가하면 하나하나한 평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에 나와 있는 즉시 지정취소 사유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평가지표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렇게 규정한 취지는 나름대로 학교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목적에 의해서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설립이 되고 그랬을 때에 개선의 여지와 또 개선의 의지 그리고 또 사안의 경중,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다소’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가지표 개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진후 위원 그러려면, 이렇게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려면 시행령을 왜 이렇게 바꾸어서, 즉시 지정취소 사유까지를 명시해서 시행령을 개정하십니까? 시행령 개정한 것도 교육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을 그대로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정진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초

등학교 교과서에도 한자를 병기하겠다고 작년 9월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위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과서에 한자 400~500자를 병기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굳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 이유가 뭐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최근에 한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거기 신문 여론에 보면 ‘한자문맹’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동음이의어에 대한 문제,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제대로 못 쓰는 경우, 이런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초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5학년 교과서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자를 병기하던 옛날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예요. 저기 보면 “의견(意見)을 조리(條理) 있게 발표(發表)하는 기회(機會)가 부족한 듯 합니다.”,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기 위한 회의(會議)는 그리 많지 않았 습니다.” 옛날에 저렇게 저런 문장 속에 한자를 병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읽고 공부하기에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전문가들 판단에 따릅니다.

○도종환 위원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인데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2개 중에 아이들이 읽고 공부하기 쉬운 것은 지금 쓰는 교과서이지요. 개념어들의 한자를 전부 괄호 안에 넣어서 저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학습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1980년대 후반부터 신문에서 한자가 빠지고 공문서에도 한자를 안 쓰지요. 교과서에서도 한자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변화되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었다고 봐요. 국회의원 배지도

한자에서 한글로 ‘국회’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한자를 병기하게 되면 아이들은 필수한자 500자를 무조건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학습부담, 사교육부담 증가가 될 것이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정규수업 과목에 한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자수업을 하게 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봐 주세요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에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초등한자 병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가 13.2%, ‘할 필요가 없다’가 52.7%, 다시 말해서 반대의견이 65.9%에 달했어요.

‘학생 학습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94.1%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91.1%에 달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한자병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장관님, 이런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전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이런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자병기 문제를 추진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등교육과정에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 이것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가르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등교육 과정에서까지 이렇게 교과서에다 한자를 병기하게 되는 방식은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고 아이들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오늘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또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러나 교육과정과 또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전문적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 가지

나눠 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상일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께서 ‘보통 감사결과 발표까지 한 6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금주 내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건국대학에 2013년 12월 9일 감사가 끝난 뒤에 2014년 1월 13일에 처분사항을 통보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경우는 감사 한 달만에 처분 통보가 내려진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지대는 이렇게 감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처분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위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전혀 없습니다.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관실에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 달라 그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그리고 금주 내로 한다는 것이, 금주가 내일모레가 금요일이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60일이 되기 때문에, 아까 12월……

○도종환 위원 금주라고 하신 말씀이, 금주가 이틀 남았어요. 내일모레까지 발표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제 얘기가 아니라 감사관실 얘기입니다. 12월 11일이라 업무 처리 과정상 60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2월 11일이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도종환 위원 그리고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2개 대학이 임원 간의 분쟁 때문에, 6개 대학은 회계 부정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어요. 교비회계 자금 횡령, 이사회 허위 개최, 이사회 운영 및 이사회 이사 선임의 부당, 이런 등등의 이유만 갖고도 저렇게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지대 상황이 이 대학들보다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시이사들 파견한 대학들 상황과 상지대하고 비교하시면 상지대가 덜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비교해서 판단하기는 저로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종환 위원 덜 심각한 증거, 덜 심각한 근거,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지금 정대화 교수 납치 시도, 폭력 사태를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가 비리 사학 옹호한다는 말을 듣지 말고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법률적 사유가 충족되면 장관으로서의 의 없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내렸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도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장관께서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오후에 그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는 있었습니다만 조금 제가 다른 관점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올해 70% 시행을 하는데요. 자유학기제의 핵심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나름대로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진로 체험과 관련한 각종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꿈길’ 사이트.

장관님,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는 직접은 안 봤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셨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할 것도 없이 느끼실 텐데요.

이 ‘꿈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오픈되었는데 체험처 등록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049곳, 그런데 서울시 아니고도 전라남도교육청은 1170곳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은 4곳, 전라북도교육청은 3곳, 울산교육청 2곳, 세종시교육청 2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교육청도 10곳.

그러면 도대체 1000건이 넘는 체험처를 등록해 놓은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두세 곳 등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별로 균형이 맞습니까? 균형이 맞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은 그야말로 관심이 없는 증거지요, 이런 교육청에 대해서.

○박혜자 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청이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유학기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체험 인프라 구축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구축해 놓은 것이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난다라고 한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하고 제대로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생각해 봐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실제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위해서는, 사실 지방에는 거의 없지요, 대도시 이외에는? 그렇다면 진로 체험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 주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문해서 하게 되면 잠깐 보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된 시간 내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현장 방문밖에 안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직업에 대해서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제 걱정이 틀린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그동안은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을 많이 했는데 전면 하기 때문에……

○박혜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육부장관께서 계실 때 정말 최소한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지역의 권역별로라도 진로 체험시설이나 진로

체험관을 지역별로 권역 내에서 좀 만드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법도 만들고, 진로 교육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래서 법도 만드시는데 당장 진로 체험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권역별로 한 두세 군데라도 만들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만들어 주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정말 진로계획을 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제 제안을 정말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훈 박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박홍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 장관님, 아까 교육재정 관련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교육재정은 확충되어야 한다.’ 이렇게 소신 있게 발언해 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저는 그 진의를 믿고 싶습니다. 지난 달 26일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교총이나 전교조, 교육계 전반 또 교육감들이 정말 교육 현실을 무시하고 이것은 경제 관료 논리만 그대로 대통령께서 반영한 그런 편향된 주장이다 이렇게 우려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이후에 교육감들에게 ‘이것은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년도 교육부 입법계획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방향을 봤더니 교육부가 현재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교부금을 누리과정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할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3월 관계부처 심의, 5월 말 국회 개정안 제출, 8월 말까지 국회 통과,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면서 상세 일정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이대로 추진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 취지가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이런 부분, 특히 유보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런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또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 정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 지금 되게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요 유보통합을 통해서 우선 법 정비를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있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그리고 이런 법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까지는 이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또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1년 내내 입씨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전 법적 정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지방교육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 들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안에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 보도를 냈더니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이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라고 저는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장관께서 다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조금 오히려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의지가 여기 실려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누리과정까지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박흥근 위원 그 준비의 절차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는 기관 통합도 당겨서 해 달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것 관련해서? 애초의 일정대로라면 교육청의 의견 수렴도 하겠다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감들하고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저는 만약에 장관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최고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유보통합을 분명하게 하셔서 법령 정비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있던 예산, 보건복지부에 배정되었던 이 예산을 이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반영하지도 않고, 그냥 법에만, 현재 있는 그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다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넣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고 법 개정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하여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큰 트랙은, 큰 가는 길은 유보통합을 전제로 해서……

○박흥근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아마 이 문제가 쟁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장관께서 자초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요. 저도 이 문제는 집요하게 앞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오늘 보고한 자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우겠다, 결국 지방 부채의 뿔을 다 지금 지방교육청에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저로서는 다 납득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한번 제가 제안해 볼까요?

그러면 장관께서 우리 상임위하고 또는 필요하다면 이것은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또는 필요하다면 시·도교육감들 또 관계전문가들 좋습니다. 진짜 교육재정이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효율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법 개정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번 우리 상임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냥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 법 개정 추진하지 마시고 열어 놓고 한번 논의의 장을 열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유보통합……

○박흥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입법계획에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문까지 보내고 계시다면서요. 지금 국회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것은 정부의 계획이고요. 유보통합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계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일정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박흥근 위원 별도의 재원 확보 없이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는 것은 그동안의 교육 복지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일만 벌이는 꼴입니다. 일단은 어떤 사회적 논의체라고 그럴까요, 이런 교육계의 논의가 얼마만큼 원만해지는지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존경하는 박흥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이것이 재정 부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유보통합이라는 이 대원칙은 그대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기 내에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흥근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볼 텐데요.

대입제도 간소화가 현 정부의 입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3학년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 치룹니다. 2학년들은 수준별 수능 폐지하고 한국사가 필수시험으로 들어갑니다.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영어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모든 학년이 각기 다른 시험체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3년 예고제에 따라서 교육부는 미리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얘기하지만요, 이게 과연 대입제도 간소화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겠어요?

여기에 더 덧붙여서 문제를 일으킨 게 지난번에 소위 인성평가를 금년도 교대하고 사대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장관께서 하신 발언입니다. 나중에 교육부가 서둘러 진화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정말 민감한 대입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발언하신 장관도 부적절하셨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합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평가원, 그것을 교육부 이관으로 추진하자고 그때 얘기했고 장관께서도 필요하고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안에서 ‘혹시 수능에서 또 문제 생기면 장관 옷 벗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여전히 국무총리실에 그냥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은 그렇게 검토한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가지 입시제도가 매년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3년이라는 말미를 두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은 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성평가 부분은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은 없다고 교육부가……

○박홍근 위원 지금은 학생부에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말씀은 사대나 이런 데 그걸 금년도부터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진화하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하는 말은 교육부에서 마련해 준 걸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그때

언론 일면에 이상한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한다는 건데 또 언론은 ‘그것을 말바꿨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교육부 내에서는 일관되게 죽 해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만 교원 양성과정에서는 이것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원하고 EBS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하게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일을 더 맡느냐 안 맡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설훈 김태년 위원께서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질의해 주시지요.

○김태년 위원 지금 박홍근 위원님께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총리실에 유보통합TF팀의 실무 책임자가 부단장 아닙니까? 그래서 부단장 들어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계획 자체도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재정대책을 전부 내년 이후로 미루어 놔버렸더라고요. 재정대책이 어떻게 보면 유보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걸 다 내년 이후로 미루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아니, 정부가 의지가 있냐? 일단 이것부터 의심이 들지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사회부총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부총리께서 점검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교육재정 관련해서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1조 3475억 원 감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누리과정 시도교육청 부담분과 어린이집 부담분까지 가중되어서 지방교육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급기야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방금 박홍근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서 해결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1조 3500억 정도가 준 게 2013년도 세입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 6733억 원, 이게 뒤늦게 반영이 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문제는 올해에도 말이지요, 올해도 무려 10조 9000억, 11조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김태년 위원 이중에 내국세가 한 7조 2000억이 될 것이고, 이 7조 2000억에 20.27%면 약 1조 5000억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줄게 되잖아요?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이걸 작년 분이 반영되니까 올해 세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한 1조 5000억이 영향을 받게 돼요. 줄게 돼요.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부가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올해 정부의 의지는 어떻게 해서든 경제 활성화를 다수당에서……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의 세입과 관계없이 작년에 11조 정도의 세수 결손분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1조 5000억 부분은 감안해야 됩니다.

○김태년 위원 세수결손 때문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5000억 정도 영향을 받게 됐다고요, 줄게 됐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당연히 감안해야 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정이 자꾸 줄면 계속 지방채 발행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부담이 되고 하는 이 악순환에 대해서 사실 제일 큰 고민이지요.

○김태년 위원 지금 당장 현실로, 이건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로 딱 드러난 사태 아닙니까, 내년도 분이 1조 5000억이 줄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이게 반영이 될 건데, 이거 지금부터 대책 안 세우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 별로 대책 안 세우시는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것은 그러니까요.

○김태년 위원 재정당국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우리 예산 잘 때 이거 합니다. 그런데 1조 5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정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올해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해서 세수를 늘려서 올해부터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답안을 교육부로서는 재정당국에 받아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고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장기 교육재정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 이것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큰 테두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설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3분만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훈 말씀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다른 내용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고요.

장관님, 국립대 경영평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국립 의대……

○정진후 위원 국립대병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위원 작년 11월 28일 예산소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당시에 차관님, 그다음에 기획실장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12월 5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장관님도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국립대학교병원 경영평가에서 대학병원들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평가항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장관님께서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월 3일 교육 상임위원회 설훈 위원장님께서 주최하셔서 국립대병원장들 오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진료, 그리고 지역 공공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

용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장관님에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평가편람을 작성했던 용역진에 전문가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계획, 기재부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기타 공공기관은 필수경영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1월 7일 토론회에서 기재부 관계자도 참석을 해 가지고 기재부 담당자가 뭐라고 했느냐? ‘기타 공공기관 평가는 주무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경영평가의 방식이나 편람 등 기재부에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기재부가 마치 상황 실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처럼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제시한 편람, 이것은 참고일 뿐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1월 7일 토론회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의 주무부서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한 경영평가 편람을 만드는 데 보건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어떤 상의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작년 12월 19일 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착한 적자’ 이것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착한 적자, 공공보건의료 사업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보건복지부는 ‘아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착한 적자 비용 문제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이 없어서 올해야 비로소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 왔어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정진후 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국립대병원 평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감안하셔서 대학병원 평가를 하려면 공공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점검하시고, 그리고 있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착한 적자의 개념을 정

확하게 반영하고, 그리고 교육과 연구와 진료 그리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하느냐에 대한 평가지표를 명확하게 산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평가는 4월까지 연기한다 어쩐다 그러시는데요. 일단 유예를 하시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유예를 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완비돼서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고,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해야지만 대학병원에 대한 신뢰, 평가를 하는 평가기관으로서 교육부의 신뢰, 이것이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현재까지는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시행을 해 오고 여러 가지를 결정해 왔는데……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는 얘기를 직접 듣고, 평소에 제 생각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진후 위원님 말씀도 다 보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도 의논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정진후 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공주대 등 국립대학 총장 임명제정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거부사유 비공개 문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학 구조조정 개혁 관련 지방대학 보호방안, 자유학기제 역량 강화, 국립대병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경영평가 기준 마련, 운동부 학생에 대한 학업지원 문제, 해외 한국학교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적과 고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지대 이사회 긴급처리권 남용 문제, 최근에 있었던 교수 폭행사건, 교수 직위해제·파면사건 등 제반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 교육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소관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교육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한선교·윤재옥·강은희·박주선·배재정·조정식·안홍준·도종환·이에리사·신성범·정진후·윤관석·박혜자·유기홍·유은혜·유재중·서용교·김태년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우여 부총리님, 김재춘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정책기획관	신익현
국제협력관	김영곤
학교정책관	오승걸
교육과정정책관	박제윤
학생복지정책관	전우홍
대학정책관	배성근
대학지원관	배이승
학술장학지원관	최은옥
지방교육지원국장	승용배
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
교육안전정보국장	이경희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국립특수교육원장	우이구
중앙교육연수원장	정일용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성삼제
국립국제교육원장	이병현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윤용식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출석 위원(28인)

강은희	김태년	김학용	김희선
도종환	박대출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서용교
설훈	신성범	안민석	안홍준
염동열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정진후	조정식

○청가 위원(1인)

신의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이정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	김재춘
겸 장관	김관복
차관	김동원
기획조정실장	한석수
학교정책실장	김재금
대학정책실장	이기봉
대변인	박준모
사회정책협력관	
감사관	